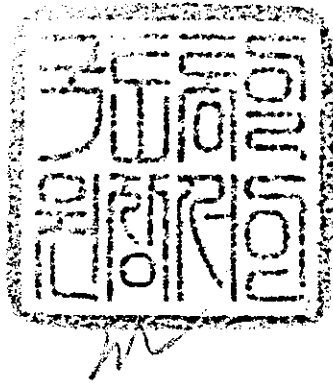


民族統一大計研究  
세미나結果報告書(綜合)



國土統一院



- I. 이 책자는 国土統一院의 「民族統一大計」研究計劃案  
作成을 爲하여 開催한 一連의 세미나結果를 綜合整  
理한 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것  
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  
되는 것임.

# 民族統一大計研究 세미나結果報告書(綜合)

刊行責任 梁 榮 植 ( 政策企劃室補佐官 )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目 次

1. 統一問題研究의 새로운 方向摸索 ..... 5
2. 北韓問題研究方法論 및 美国에 있어서의 北韓研究 實態 ..... 43
3. 民族統一大計研究의 設計圖作成問題 ..... 75
4. 北韓社会의 構造的矛盾에 관한 研究 ..... 105
5. 民族統一大計研究設計圖 試案檢討 ..... 153



# 1. 統一問題研究의 새로운 方向摸索





## 目 次

1. 一 般 事 項 .....	9
2. 主 題 發 表 內 容 에 關 한 要 約 .....	10
3. 主 題 發 表 內 容 .....	16
o “ 統 一 問 題 研 究 의 새 로 운 方 向 摸 索 ”	

本 日

第 一 一 一

表 面

表 面

##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76.10.15 (金) 14:30 - 18:00

나. 場 所 : 當院 狀況室

다. 主 題 : “統一問題研究의 새로운 方向摸索”

라. 세미나 參加者

(1) 特別參席 : 董 勳 (次官)

(2) 院 外 : 7名

金學俊 (서울大教授), 文丞益 (中央大教授)

白完基 (國民大教授), 安秉永 (延世大教授)

柳世熙 (漢陽大教授), 李相禹 (西江大教授)

李容弼 (自由學院教授)

(3) 院 內 : 7名

政策企劃室長, 第 1, 2, 3 担当官, 朴一聖 研究委員,

梁榮植, 金炳燾 補佐官

ㅁ. 司 會 : 宋榮大 (第 1 担当官)

ㅂ. 記 錄 : 金炳元 (第 1 担当官室 勤務)

## 2. 討議發表 內容에 관한 要約

### 가. 討議方向

#### (1) 統一問題研究 方法論 檢討

##### (가) 既存統一問題 方法論에 대한 評價

- 研究의 成果
- 研究上의 問題點等

##### (나) 새로운 研究方法論의 摸索

- 研究接近法, 手段
- 研究의 先行條件, 段階

#### (2) 統一問題研究에 關聯된 課題의 提案

#### (3) 統一問題研究環境의 造成問題

- 人的資源面
- 資料面
- 制度, 機構面

### 나. 討議內容 要約

#### (1) 統一問題研究 方法論 檢討

##### (가) 既存統一問題 研究方法論, 研究成果, 研究上의 問題點에 대한 評價

- 從來 研究方法論으로는 社會科學的 理論으로, 歷史的 接近方法, 內容分析方法, 主題分析方法 등이 많이 使用 되었으며 收斂理論쪽도 좀 나왔으나, 收斂理論自体의

妥当性에 대해 否定的으로 보는 理論이 導出되는  
傾向이 있으며 수렴理論으로 南北韓問題를 보기에  
制約點이 많으며 統合理論쪽 研究가 가장 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統合理論에 依한 研究가 要請된다.  
그리고 歷史的 接近法은 퇴색한 方法論인듯 放棄해  
點이 있으나 이런 接近法에서도 좋은 結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 近年에 行態論研究, 計量的 分析이 擧論되는데 이와  
關聯해서 資料求得의 円滑化 方案檢討가 되어야 할  
것이다.

○ 研究의 実績이 별로 없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統一  
問題研究가 持續的이 못되고 斷絶的이었기 때문이며  
既存研究를 整理하고 그 土台위에서 다시 進行되는  
點이 아쉬웠다.

- 北韓研究 接近方法의 具體的인 것으로는

- ㄱ) 法律制度的 接近이 가장 많은 것이었으며
- ㄴ) 權力接近法은 部分的 試도가 있었을 뿐이며,
- ㄷ) 엘리트研究는 國內에서 試된것은 별로 없고 서대숙  
씨가 해온 것이 상당히 많다.
- ㄹ) 政治文化接近은 北韓社會의 資料不足으로 研究가  
不進하며
- ㅁ) 構造的 接近도 資料不足으로 研究가 不足하며

○ 従来 北韓問題는 그때그때의 必要에 따라 対応的으로 研究되어 왔으며 綜合的 “틀” 속에서 南北韓問題를 보는 論議가 不足했다.  
整理되고 機能的 聯関關係등을 意識하는 線에서 研究가 되어졌으면 한다.

(4) 새로운 研究方法論, 接近方法論, 手段, 研究의 先行條件

○ 「메이타 인벤토리, 方法論인벤토리」, 지금까지 이룩한 研究의 「인벤토리」 北韓學研究者의 「인벤토리」등의 作成이 앞으로의 研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새로운 研究方法論, 接近方法論을 摸索할때, 研究의 目的이 純粹理論이나, 政策建議 냐에 대한 규명이 先行되어야 할 前題라고 본다.

○ 比較共產主義 體制에 관한 研究가 必要하다.

蘇·東歐에 關한 研究는 文化的 制約이 있긴 하나 北韓研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西歐學者들의 蘇·東歐研究 方法을 우리가 北韓研究에 그대로 導入하는 것은 適合性的 問題가 생길수 있겠

는데, 勿論 西歐學者들이 自己 必要에 依해서 하는

研究의 視角과 우리가 우리의 必要에 依해서 하는

研究의 視角과는 多小 다를 것이나 그들의 既存研究

를 主台로 우리問題와 聯関된 變數를 찾아내면 그

問題도 解決될 수 있다.

○ 政治文化的 接近方法의 試圖도 必要하겠는데, 北韓에서  
은 避難民, 間諜等을 通해 北韓의 政治文化接近이 可能  
하다고 본다.

○ 北韓研究者에게 必要한 것은,

1) 共產主義理論의 「마스터」

2) 經 驗

3) 資料라고 보며 北韓研究者는 心理戰코스를 거칠 것도  
必要하다.

心理戰코스를 밟으면 北韓의 意圖把握이 可能하다.

資料不足에는 理論, 自己의 經驗등을 動員하고 自己靈感  
의 動員도 必要하다.

(2) 統一問題 研究에 關聯된 課題 (앞으로 研究에 注重해야 할  
課題)

○ 分斷國統合理論 : 分斷國이 아니어도 聯邦을 形成했다든지  
한나라들에 관해서는 北韓의 聯邦制 理論에 対応한다는  
側面도 됨으로써 聯邦國家에 대한 研究가 많이 나와  
야 하겠고 統合体에 對한 研究도 많이 나와야 하겠다.

○ 協商事例研究 : 主로 共產圈과의 協商, 板門店會談에서의  
對北協商, 國共 合作, 핀란드, 蘇聯協商, 越南問題에 관한  
과리協商, 하노이의 意圖, 하노이가 그것을 어떻게 利用했  
는가等을 通해 南北關係를 關聯시켜 研究할수도 있겠고,  
協商事例研究를 通해 協商理論의 추출도 可能한 것이다.

- 狀況分析予測：國際情勢에 관한 것으로 周辺強大國의 韓半島構想은 繼統 追跡해야할 題이다.  
例컨대, 美國의 韓半島政策에는 大개 4-5 個의 基本的 아이디어들이 있으며, 그것이 時期에 따라 選別되고 強調, 採択되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 南北韓 力量比較：從來 可視的力量만 比較해 왔는데 政策的 次元에서, 統一政策推進體에 關한 것으로 政策을 밀고 나갈 主力軍을 어떻게 形成할 것인가에 대한 研究도 要한다고 본다.  
이는 社會動員과도 有關한 것으로 神經을 써야할 點이다.
- 南北韓 統一政策比較：엘리트研究等이 包含되겠지만 南北韓의 內部社會勢力의 糾明도 研究가 必要하다.
- 統一政策運營：統一院內에 研究協議部 같은 對外學者들과 接觸하고「콤비네이트할 수 있는 內部業務用이 아니라 對外支援用으로 獨立된 部署가 하나 마련되었으면 한다.

### (3). 統一問題 研究 環境의 造成

- 서울이 北韓研究의 센터가 못되는 것은 研究方法論의 缺陷이나, 未熟때문이 아니라 與件造成面 때문이며 霧田氣問題, 資料問題「프로젝트의 비연계성등 때문이며 統一院이나 中央情報部나 其他 研究所等 어떤 機關에서든 研究의 센터가 생겼으면 한다. 그리고 현재와 장차에 必要한 것은, 研究者들에게의 資料閱覽의 便宜提供等 制度的 마련이다.



- 根本적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는 北韓研究의 底辺擴大가 必要하다는 것, 大學에서의 講義開設, 北韓學科의 新設等으로, 北韓學研究者의 人員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 한가지 反省할 것은 資料는 創出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사람이 「팀워크」할 수 있는 「코딩시스템」등이 마련되었으면 資料創出作業은 容易해질 수 있을 것이다.
- 「데이터」를 選擇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마련되어 「데이터뱅크」라도 具備되었으면 한다.

北韓學센터로서의 役割을 統一院이 해주기를 要望하며, 圖書館開放等の 便宜提供, 北韓學學會結成等 지금段階로써는 研究方法論 摸索보다는 研究支援, 研究人員確保等の 研究風土造成이 더 時急하다.

### 3. 토의발표내용

사 회 : 우리 통일원이 1969년에 발족된 이래 만 7년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통일문제연구자 기초적 초보적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태인데 지나간 연구태도를 살펴보고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

통일문제가 북한연구, 공산권연구, 국제관계연구등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나 물론 북한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겠는데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연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 오늘은 이들을 함께 묶어서 취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일원이 정부기관이므로 정책수요에 입각한 연구방법론에 치중해서 얘기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 제 1 항 : 통일문제연구 방법론 검토에 관한 토의부터 시작하겠는데 먼저 기존 통일문제연구 방법론에 관한 평가, 연구성과나 연구상의 문제점도출,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있어서의 연구접근법, 연구수단, 연구의 선행조건, 선행단계등에 관해 토의해 주기 바란다.

김학준 : 연구성과라 하면, 여기 기록된 각 항목대로 대체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고 본다. 연구방법론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시도가 되어져 왔다고 생각되는데 통일문제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역사적접근방법, 내용분석방법, 주체분석방법등이 그간에 많이 나온 것이며 역사적연구 방법론이 제일 많이 사용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수렴이론쪽은 좀

나왔으나 수렴 이론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론이 도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렴 이론으로 남북한문제를 보기에 는 약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통합이론쪽의 연구가 아직도 가장 약하다고 보며 앞으로 통합이론에 의한 남북한관계에의 연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안병영: 일반적으로 볼때 통일문제 연구가 꽤 진척돼 왔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의 집적은 별로 안돼온 것 같다. 그것은 지금껏 통일문제 연구가 지속적으로 못되고 단절적이었기 때문이며,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그 토대위에서 다시 진행되는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된다. 수렴이론에 관해선 접근의 방향, 변수등에 관한 분석적 방법은 한국의 경우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며, 통합이론에 관한 논의는, 2-3년전부터 시작했으나, 그러나 남북한 문제에 관한 집중적 연구는 부족했다고 본다.

사회과학방법론에서 볼 때, 북한연구에 있어서 역사론적 입장에서의 접근방법을 많이 써 왔다. 즉, 북한정권수립이나 그 이전의 한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발생한 초기부터 살펴본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역사론적 입장에서의 접근방법은, 퇴색한 방법론인듯 방기해온 점이 있으나 이런 접근방법론에서도 좋은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근년에 행태론적 연구, 계량적 분석방법이 거론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부족이 얘기될 수 있으며, 사실 북한에 관한 자료는 너무 적어서 손대기 힘든 점이 있다.

자료구득의 원활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 북한문제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대응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종합적 "틀" 속에서 남북한문제를 보는 논의가 부족했다. 정리되고, 기능적연관관계 등을 의식하는 선에서 연구가 되어졌으면 한다.

유세화 : 통일문제 연구는 북한자체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미국이나 선진국의 연구방법론에 뒤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왜 서울이 북한연구에 센터가 못 되는가, 중국문제연구는 대만이 중요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학자들도 중국문제연구를 위해 대만을 많이 방문하는 실정인데, (대만의 경우, 선전효과를 노리는 점 등으로 인해 다소 과소평가되기는 하나) 서울에서 통일문제내지 북한문제 연구에서의 붐이 안일어난 것은 연구방법론의 결함이나 미숙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분위기문제, 자료문제, 「프로젝트의 비연계성 등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프로젝트가 연결안되므로써 이중 연구등으로 인적, 물질자원의 낭비등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원이나, 중앙정보부나 기타 연구소등 어떤기관에서든 연구의 센터가 생겼으면 싶다. 그래서 자료등도 체계적으로 모으고 각대학, 외국등에서 「제택스」도 해오고, 있는자료도 수집하고, 연구자들에게 자료열람의 편의도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마련이 아쉽다고 본다. 즉, 연구방법론에서는 뒤지지 않으나 여건조성면에서 제대로 안돼 있다고 본다.

사회 : 서울이 북한문제연구의 센터가 되지 못하고 농경, 워싱턴이 북한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건 곤란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의도의 하나이며,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충분히 토의하고 좀 바로 잡았으면 한다.

김학준 : 북한연구에 대한 우리의 기초적 연구가 거의 없지 않느냐는 것이 현재 우리의 통념이나 나는 그 통념에 회의감을 갖는다. 가령, 북한사회에 관해서만 해도 이정성 「스칼라피노」 공저로 되어 있는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등 두권이나 있으며, 북한경제에 관해서는 「북한경제구조」 등 북한경제에 관한 것 등 다수있고, 북한정치에 관해서는 김일영 저술의 「북한외교」, 고병철의 「북한의 대외정책」, 그의 북한

에 관한 논문 다수 등 북한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 이런 정도면 북한사회의 폐쇄성「대이타의 부족등  
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초연구업적이 있다고 본다.

이 용필: 북한이 어떤 실체인가 하는데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이란 실체를 어떻게「태극할  
것인가, 「태극자세가 제대로 안돼있는것 같다.

이상우: 여기 제시된 토의주제의 순서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본  
다. 어떤 연구든 연구노력이 집적돼야 하며, 북한연구도  
그러하다. 왜 남한에서 북한연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 4 - 5천명의 정치학자들에 의한 각부분마다  
연구가 다 돼 있는데 비해 북한학의 경우, 부분 연구  
가 안돼 있으므로, 연구라는 백지에서 전부를 새로이 살  
펴 보고 자기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형편이다.

지금 시원적 단계로써 한장씩 쌓아 올리는 격이므로 전  
체적 종합이 아직 안돼 있을 수 밖에 없다. 우선 각  
부분마다의 연구가 되고, 그 뒤에 전체적 종합을 이룩해  
야 할 것이다. 원초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북한연구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강의개설, 북한학과와 신설, 등 물론이것은 요원한  
문제라고 보나)으로 북한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인원이 많

아껴야 할 것이다.

○ 「데이터를 고를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데이터뱅크」라도 마련됐으면 한다.

북한학 센터로써의 역할을 통일원이 해주기를 요망하며, 도서관개방등의 편의제공, 북한학 학회결성등 지금단계로써도 연구방법론보다는 연구지원, 연구인원확보등과 연구풍토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김학준: 지금까지 나온 북한연구의 「인벤토리」 작성이 필요하다.

(국내외의 논문, 저술, 번역등의 총 목록)이 「인벤토리」를 조사해보면, 어느 분야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어느 분야에 연구가 부족하다는것 등이 곧 판명될 것이다.

이상우: 사실 좋은 연구도 많이 나왔다.

예컨대, 북한의 인구동태에 관해서 거의 완벽하게 돼 있으며 해방이후 북한인구의 이동상황을 주시하면 많은 암시를 준다. 약 3만명 정도의 북한 엘리트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사회경제적 배경을 망라한 것으로써 이런것이 컴퓨터화 해서 240개의 변수들로 분류 정리되어 있다.

○ 「데이터 인벤토리, 방법론 「인벤토리, 연구의 (지금까지 된)

「인벤토리, 북한학 연구자의 「인벤토리, (북한학 연구자 파

와 필요)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들, 이런 걸 한군데 모아 두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 회 : 4 가지 「인터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일원이 73년에 간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50년에서 73까지의 통일문제에 관한 국내발간 연구자료, 논문, 등 1,300 개정도가 모아진 것이 있다. 그러나 방법, 자료, 연구자에 관한 「인터뷰」 개발 등은 새로이 개척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문승익 : 지금껏, (1) 항 (가). 기존 통일문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평가, 연구성과 등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 새로운 연구방법론 모색, 연구접근법 등에 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문승익 : 하려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 통일에 관한 순수이론이나, 정책건의냐에 따라 연구방법은 달라진다고 본다. 우리가 여기서 연구방법론, 접근법이라 할 때, 무엇을 하려는 연구법이고 접근법이나를 묻고 싶다.

사 회 : 제 1차적 목적은 정책건의에 있다고 할 수있으며, 또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순수이론의 발전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므로 함께 제시해 놓은 것이다.

문승익 : 정책건의가 주된 목적이라면, 우리가 연구할 때 어떤 테두리 아래에서 하게되나 순수이론이 주된 것이라면 목표, 가치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공개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정책건의



가 목적으로 된 것이라면 이미 목표, 가치 등이 주어지므로 어떤 제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어느것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방법론, 접근방법론을 모색할 때, 이러한 전체에 대한 인식을 미리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완기 : 유교수가 서울이 북한연구의 센터가 되야 할 것이라 하고 했는데, 서울이 북한연구의 센터라고 할 때, 어디까지나 순수이론연구의 센터가 되야지 어떤 전략적인 면만 추구하는 정책중심연구만의 센터만으로는 제대로 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상우 :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유교수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센터가 돼서 어떤 정책의 제약이 없는 순수한 완전한 연구를 해가면서 거기서 나온 지식이 정책수립에 연결이 돼가는 것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정책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연구자체는 완전히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세희 : 서울이 북한연구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중앙정보부에서 전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고 하므로 서울이 센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간 학자들에게 공개가 안돼왔고, 학계와 정부측사이에

합조가 잘 안되어 온 점이 있는 것인데, 정책문제와 연구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정부에서 할 일이다. 여하튼 연구의 센터가 되어야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상우 : 사정이 급할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정책은 만들어야겠는데, 기초적 연구, 조사도 안돼 있을 경우 전부 구색갖춘 후에 순수연구가 다 된 뒤에 정책수립을 하면 이상적이겠으나 그럴처지가 못할때는, 정책수립이란 시각에서 어떤 연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가장 필요한 연구부터 골라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세희 : 순수연구면에서 우선순위는 결정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정책적 면에서 본다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 : 토의하다보니 (1)번부터 (4)번까지 다 커버된 것 같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다된 것 같으니 이러한 배경을 갖고 순서에 따라 계속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태 : 북한연구에 있어서 과거 60년대 이전까지는, 시사적 방법이 주된 것이었다. 북한서 넘어온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식의.....

현재는 내용분석이나 [엘리트]연구등의 연구방법이 쓰이는것.

같은데

- 1) 북한연구방법에 있어서 외국에서 쓰는 것은 어떤것이  
며 우리가 쓰는것은 어떤것인가.
- 2) 정책연구에는 어떤방법을 쓰느냐, 예컨대 미국이 소  
련을 연구하는데 쓰는 방법은 어떤것이며, 이러한 방  
법은 우리가 북한을 연구할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등의 각도에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상우: 지금껏 정책연구가 산만했던 이유는 간단한 것 같다.

정책이 나올려면 두가지 선행연구가 있어야 한다.

1. 규범적연구: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이런것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그 뒤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즉, 통일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별 하자는  
것인가, 평화통일 이라면 평화란 뭐냐, 북한과의 관  
계에서 양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등.
2. 현실파악: 우리문제, 북한문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문제, 주변과의 관계문제등 이런데 대한 경험적 연  
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이 나오려면 두가지 문제가 있어야 한다.

즉, 어디로 가고자하는가와,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가 분명해져야 그사이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좁힐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가 도출 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것을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규범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제약을 받아왔다.

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은 다 회피해 온 것 같다.

어떤 상태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아는것 처럼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태로 되어 왔다.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준 바도 없었고, 또 이걸 함부로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막혀왔다.

그러니까 지금껏 되어온 것은 주로 경험적 연구였다.

규범적인걸 떠나서 경험적 연구만 되어 왔으므로 정책연구가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것이 전체적 개관이고, 경험적연구가 지금껏 북한연구에 있어서 중심된 것이라 보는데 북한연구 접근방법으로는

○ 법률제도적 접근 : 북한헌법, ... 등에 관한 것으로 쉽기 때문에 연구업적은 가장 많았다고 본다.

○ 권력 접근법 : 부분적으로 시도된 것이나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 「엘리트」 연구 : 한국내부에서 된 것은 별로 많지 않고  
저대숙씨가 해 온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

○ 정치문화접근 : 북한사회에 대한 「데이타」가 없으므로, 귀  
참고 어렵고 해서 거의 손을 못 대왔  
다.

○ 구조적 접근방법 : 자료부족으로 연구부진

○ 체계적 접근방법 :

그런데 하나 반성할 것은, 자료는 계절로 굴러오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 자료  
추적없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연구만 해오는 경향이 있  
어왔다.

혼자서 어려운 자료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예컨대, 남북대화에서 북한쪽이 우기는 주제의 강도변화를  
보기 위해 달리지료도 없고 해서 북한노동신문 사설을  
갖고 내용 분석해 보려했으나 「코딩하는데만도 혼자서는 시  
간이 너무 걸려 난처해진 적이 있는데, 여러사람이 「팀웍」  
을 할 수 있는 「코딩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런 작업  
이 훨씬 용이하게 진척되리라 본다.

유세회 : 연구방법론을 북한연구와 결부시켜 고려해보자했는데, 각

연구방법론은 저마다 장단점을 지니므로 어느것만 좋다 하  
기는 곤란하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Contemporary China Studie 라는 위원회  
가 있는데, 중국관계연구자들의 모임으로 거기서 하는 일  
은 한달동안 나온 중공관계연구 업적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접근방법을 사용했는가 등이 검  
토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개발, 연구방법들에 대한  
상호비판 새로운방법에 의한 시도등도 되여지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연구방법을 몰라서  
연구가 제대로 안되는게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  
서 연구방법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사 회 : 안박사님, 그간 북한연구방법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론  
같은걸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병용 : 평소애 미흡하다고 느껴온 것중의 하나는, 비교공산주의 체  
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학계에  
서는 많이 된 것인데, 우리의 경우 관심도 적게 부여되었  
고, 이것이 북한연구 자체를 부진하게 하는 제약조건이라  
본다. 예컨대, 북한정치체제의 변화문제를 생각한다면 미  
리 발전된, 성숙된 체제연구가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  
떤 통찰력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가능성도 찾아

낼 수 있고, 대개 이런 변수가 작용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는 추측 및 이론적 틀 같은 것도 마련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근래 중공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되고 있으며 물론 문화적 제약도 있으나, 소.동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에 김학준교수의 「쏘련정치론」 역작이 나왔으나 동구에 관한 연구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되고 있고, 연구소도 많은데 비해 관심 가진 분도 수적으로 아주 적고, 학문적으로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소.동구연구가 북한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여하튼, 비교공산주의체제연구 같은 것이 큰 개발가능성을 던져주리라 생각한다.

단 한가지는 제가 북한연구한 것 중에 체제접근법 맥락에서 약간 시도해 본 바 있고 「엘리트」 연구도 좀 해 봤는데 특히 「엘리트」 연구에서는 말할 수 없이 빈약한 자료로 논외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나 자신도 납득하기 어려운 연구들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엘리트」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는 상당히 나오고 있으나 사실상 시사적으로 그때그때의 시각에서 아주 단기적 조망에 그치는 점이 대부분이다.

누가 어느 행사에 참석했나, 안했나, ...이런식의 해석에 관

심이 쏠리는 건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자료난 문제에선 서대숙교수같이 풍부한 자료속에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부럽다.

특히 「엘리트」 연구에서는 「엘리트」층에 관한 집중적 연구에만 그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전체의 정치적 유층화에 관한 자료부족으로 북한엘리트의 성장과 충원을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갖고 전개될 것인가하는 것에 관한 연계적연구가 곤란하다.

외국학계등과 연구의 제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료부족으로 체제접근법 같은 것도, 어떤 "틀" 작성의 논의에 그치게 되고, 더이상 못들어 간다.

개인적으로는 자료구득할 데가 거의 없다.

종래엔 통일원이나 고대, 아세아문제 연구소에서 조금씩 얻었을 뿐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 자료가 많으리라 여겨지는 중앙정보부자료는 거의 손대지 못했다.

이런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학계와 정부기관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부 기관간에도 사실상 정보교환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가 싶은데 이런점은 이론정립이나 정책 연구를 위해서, 보다 고위수준에서 정책적 결단을 요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가 해결안되고는 북한문제연구의 바람직한 발전



이 크게 저해 된다고 본다.

사 회 : 모든 문제가 자료빈곤으로 귀결되는데, 그건 우리가 시인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겠는지?

서구학자들의 쏘·동구에 관한 연구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북한연구에 도입하는 것은 북한이란 특수성을 고려할때 과연 그것이 북한연구에 적합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는 매우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안병영 : 그 문제는 기본적인 연구태도와 연관된다고 본다. 동구나 쏘련문제를 연구한다고 할때, 서구학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연구의 시각과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연구의 시각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서구학자들이 하는 연구방법론이 그대로 원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의 기존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문제와 연관된 변수를 찾아내면 그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서구학자들의 연구가 우리에게 사실상 다시 전해지는 작업도 안되어 있고 그걸 기초로 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연구도 안돼 있다고 본다.

이상우 : 안교수가 비교공산체제연구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필요한 연구라고 본다. 비교를 해 봐야 특색이 들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 북한을 그저 공산국가라 일별해 버려나 공산주의도  
여러가지인것이므로 비교공산주의 연구도 비교공산체제 연  
구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다. 제도에 관한 비교도 필요  
하지만 사상내용에 관한 비교도 필요한 것이며, 비교를 해  
봐야 북한공산주의의 특색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다.

백환기: 정치문화적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우: 정치문화연구는 북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적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이용필: 정치문화적 접근이라면, 「하바드」에서는 소련연구를 망명자,  
피난민 등을 통해 소련의 정치문화연구를 해왔다.

우리의 경우, 북한에서는 피난민, 간첩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문화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상우: 이북서 월남한 분이나 간첩등을 통해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체포된 간첩의 경우 검찰, 수사당국에서  
관심있는 것은 그의 유죄, 무죄여부에 한정되는 경향을 지  
니나, 실은 그 뒤에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한 것이  
다.

가령 6.25 당시 체포된 간첩의 심문 기록을 보면 임무에

대한 지령내용이 48년가면서 달라지는데 50년초에는 몇 달 동안의 지시가 떨어져 있었다. 이런걸 통계 처리하면 50년 6월의 남침을 알아낼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외용 간첩수기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보적 측면등에서 많은 것을 생략, 혹은 보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독하기 쉬워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간첩등을 통해 「데이터작성이 가능하다. 물론 그걸로 전체 북한주민의 상태를 유추하기는 타당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이런식으로 「데이터작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중래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작성하는데 관해서는 기회도 안 주어졌고 환경도 마련되지 않았었고 했다.

앞으로는 「데이터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금후로는 통일원이 주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 회 : 최근에는 않고 있으나 우리가 몇년전에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런것이 연구되면 도움이 될 걸로 본다.

박일성위원장님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일성 : 최근에 와서 한국이 세계에 있어서 북한문제연구의 센터가

되어야 할 것 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 기관으로  
써 자료를 가진 곳이라면 중앙정보부인데, 정보부의 목적의  
식과 통일원의 목적의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왔다.

또한 원 자료를 봐야겠는데 원 자료 보는데 또한 제한이  
있어 왔다. 북한문제 연구에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다.

북한문제 연구에 처음에 자료를 봐가지고 익히는 방법도 있  
으나 내 경우에는 우선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생태를 마스터  
하고 그러면서 자료를 봤는데 좋은 방법이었다고 본다.

같은 문제를 소·동구인들이 평가하는 것과 북한에서 나온  
것이 다르므로 거기서 비교의 문제가 나온다고 본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공통적인 발상법이 있지만, 북  
괴와 동구인들과는 잠재적으로 발상법의 기초가 다르다.

이것부터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

북한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1) 공산주의 이론의 마스터

2) 경 험

3) 자 료

그리고 북한연구자도 심리전코스를 거칠 것도 필요하다.

심리전코스를 밝으면 북의 의도와 악이 가능하다.

자료 부족에, 이론, 자기의 경험등을 동원하고, 때로는 자기  
영감의 동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 회 : 이번 토의는 (3)번 “ 통일문제연구에 관련된 과제 ”에 관한  
것으로 통일문제연구에도 규범적연구와 경험적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기초위에서 몇분야로 나뉘었는데,

- 정책목표의 정립
- 상황분석과 예측
- 통일이론 및 법률적 배경
- 분단국 및 사례연구
- 남북한 역량비교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통일정책운영의 기본방향
- 기타 등

우리나라대로 분야를 정하여 줘는데 각분야별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다.

김학준 : 대체로 “가”에서 “아”까지 거의 다 망라했다고 본다.

분단국통합이론등에 있어서 비단 분단국이 아니어도, 연  
방을 형성했다든지 한 나라들(통일아랍공화국등)에 관해서  
는 북한의 연방제이론에 대해 대응한다는 측면도 되겠고하  
니 연방국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야 하겠고, 통합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야겠는데 이러한것은 통합이론의 개  
발이란 측면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점이다.

그 다음에 협상사태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중요하다.

주로 공신권과의 협상, 판문점회담에서의 대북협상, 핀란드  
조선협상, 월남문제에 관한 파리협상, 하노이의 의도나 하  
노이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등을 통해 남북한 관계  
를 관련시켜 연구해 볼 수도 있고, 국공합작등도 있다.  
협상 사례 연구를 통해 협상이론도 추출될 수 있을 것이  
다.

그 다음에 상황분석과 예측에서의 국제정세에 관한것으로  
주변강대국의 한반도 구상은 계속 추적해야할 데마라고  
본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대개 4-5개의 기본적인 아  
이디어들이 있다. 그것이 시기에 따라 선별되고, 강조, 채  
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정책이 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구성과정에서, 즉 연구기관  
이나 유력인사들의 참고등에의 접근시도가 필요하다고 본  
다.

백완기: 여기는 보면 정치적으로인들만 주로 나열된것 같은데 상황은  
석에 있어선 정치외에 사회, 문화, 가치의식, 경제, 정세  
등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연구가 잘 되므로써 정치면의 연  
구도 더 잘 될 수있다고 본다.

문승익: 연구방법의 세련성정도인데, 정치성격분석(이는 2차대전때

미국에서 나치성격분석등에서 한것과 같은것)과 같은 측면에서 실체가 아니라도 정치문화접근은 샘플로 되도 의식구조, 가치관 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세희: 남북한 통일정책비교에 관한것으로 남북한 역량비교에 들어 가겠으나 대외정책관계 연구나 경제교육등의 연구도 중요하다. 「엘리트」연구등이 포함되겠지만, 남북한의 내부 사회 세력에 관한 규명등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안병영: 정책특표정립에 관해 정책화 시키기에 필요한 차원까지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북한 역량비교 등에 있어서도, 과거 통일원에서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다 각 분야별 -현우자들간에 횡적 연관없이 이루어 졌다고 본다.

바로 이런 경우 체제접근의 기본적인 맥락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절로 본다.

이상우: 첫째, 남북한역량비교에서 종래 가시적 역량만 비교해 왔는데, 정책적차원에서 통일정책추진체에 관한 것으로 정책을 밀고 나갈 주력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요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동원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이런점이 종래 우리가 등한히 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

둘째, 통일정책은 3천 5백만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하므로 국민이 바라는 통일이 어떤 것이며, 통일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선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의 선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 회 : 통일정책 운영에 있어서 평소에 느꼈던 점을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우 : 통일원내에 연우협외부와 같은 대외학자들에게 접촉하고 「컴비네이트」 할 수 있는 내부업무용이 아니라, 대외지원용으로 독립된 부서가 하나 마련됐으면 한다.

거기서 도서 판이용, 자료수집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그러한 것, 미국무성엔 그러한 기구가 있는데, 외부인은 국무성의 각 부처를 찾아가지 않고 그 기구에만 가면 다되게 되어 있다.

김공열 : 그런 용도로는 우리 통일원 교육홍보국에 상담실이 있다.

이상우 : 통일원에서, 외국말고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북한문제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벤토리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통일원내의 인척자원 외에도 누가 연구하고 있고, 어떤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가 등을 리스트로 작성해 놓으면 상호연구의 교류, 협력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



한다.

어떤 「프로젝티브」 말을 할 때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일원에서 「데이터 뱅크」도 하나 만들었으면 싶다.

그래서 연구자로 하여금 2중적 수고를 않도록 해 줬으면, 생성된 자료를 구독하므로써 돈을 덜 들이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북한이나 중국에 관해 거액을 들여 만들어 놓은 자료 같은 것도, 우리가 복사료만 갖고도 복사해올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특히 시스템을 보면 미시전에 있는 「아이.씨.피.알. 데이터뱅크」같은 곳에는 가입하고 있는 약 50여개 대학등에서, 각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1카피가 여기로 보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항상 여기서 빌려보게 되어 있다.

「양케이트」 조사한 것 등도 수 없이 모아져 있다.

우라도 남이 해놓은 연구를 우선 복사해와서라도 「데이터」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 회: 이 정도면 우리가 마련한 「토피체」 관해서는 대부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본다. 마지막으로 차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차 관: 오늘 여기서 논의된 얘기들은 15 - 20년전에 이미 나왔으면 좋은 것이었다.

우리가 통일을 하고자하는 상대로서의 「조선인민공화국」에  
관해 어느 정도로 진실을 알고 있는 가는 매우 어려운 문  
제이며, 이것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 것  
이다.

매우 늦기는 했으나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했으  
면 한다. 지금껏 여러 가지 특수과제를 위촉해 왔으며 그 결  
과가 여러 가지 책자로 인쇄되었다. 그러나 어떤 연  
구자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를 갖고 있다.

5 - 6년전부터 해 온 것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 놓  
은 이 결과물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던가에 대해 의문을 느  
낄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인판문제의 연구나, 정부의 정책이  
나 장래를 가름하는데 성실히 원용치 못하고 참고에 그냥 사장  
시켰다면 국민의 세금가져다 그런 방향으로 써야 할 것인가 하  
는 점에서 대단히 죄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 연구자로 문체에 관해 우리 통일원도 최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가 내년도에 시도하려는 이 계획을 낭비없이, 가장 효  
율적으로 완수하려면 여러 교수님의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약한 나라에 태어났으므로 강대국유력인들의 영향  
력에 좌우로 흔들리는 실정이긴 하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  
일, 우리가 해야 할 통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대로 줄거리  
(대계)가 세워져야 겠다는 것이다.

이건 외국에 돈들고 가서 용역을 쓸 성질의 것도 아닌  
것이다. 유능한 국내학자들이 내년부터 같이 참여 하고,  
합심하여 정부와 학자들간에 주객의 입장이라기 보다, 세  
대를 같이하는 우리로써 공동노력해 보자는 것이다.

내년에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기본적 틀을  
잡기위해 여러분을 모신것이다. 내년부터는 좀 더 폭 넓고,  
깊이있고, 짜임새 있는 연구조사를 해 볼까 구상하고 있  
다.

이러한 한국적인 상황하에서 자료분제는 물론 어렵긴 하  
나 앞으로 통일원으로써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볼까 한다.  
통일원 연구관들은 이를위해 좀더 자료를 정비해서 연구에  
임하기 위한 방안구상에 참수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자료수집, 활용, 사용등에 편의제  
공이 되도록 우리로써도 노력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좋은 의견을 제진해  
주시 바란다. 신년도에 들어가서 계획세운데로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계획에 맞추고자 애쓰다보면 본 말이 전도되는 경  
향이 있을 수 있는것이 관청생리의 일면이므로 우리가 하

고자 하는 통일대계연구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내년  
에 할 일을 서둘러서 확실히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내년에  
할 일을 부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모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여러분이 언제라도 와서  
지도해 주기 바란다.

2. 北韓問題研究方法論 및  
美國에 있어서의 北韓研究實態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 目 次

1. 一 般 事 項 .....	47
2. 主 題 發 表 內 容 .....	48
○ “ 北 韓 問 題 研 究 方 法 論 及 美 國 內 有 關 北 韓 研 究 現 狀 ” .....	
3. 質 問 及 答 復 內 容 ( 速 記 錄 整 理 ) .....	55

100

100

100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76. 10. 20(수) 16:00 -18:00

나. 場 所 : 当院 狀況室

다. 主 題 : 北韓問題研究 方法論 및 美國에 있어서의 北韓問題

研究實態

라. 發表者 : 高병철 博士 (美國 일리노이주大學 政治學 教授)

마. 參加者 : 次官

3 級以上 全職員

바. 記錄 및 整理 : 梁榮植 (政策企劃室 보좌관)

## 2. 주제발표 내용

○ 오늘 발표는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는 가운데 직접 경험한 사실, 즉 미국에서 북한연구를 하는데 자료는 어떤것을 사용하며 어떤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가를 개괄하여 설명하고 생각나는 대로 미국에 있어서의 북한연구의 실태등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어느분든지 의문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개진해 주시게 되면 가능한한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해보겠다.

○ 10년전 재미한국학자가 미국의 잡지에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려면 한국연구보다는 북한에 관한 논문을 써야 발표될 가능성이 컸던것이 사실이다. 그 큰 이유중에 하나는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며, 학술적으로 주요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북은 비공개 폐쇄사회일뿐 아니라 미국의 현재의 적이며 또는 가상적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공산주의 국가중에서도 독특한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학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재미한국인학자들이 북한문제를 많이 연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초창기에는 미국인 학자 특히 "글린 페이지" (하와이대학 정치학 교수) 같은 교수들이 한국학연구에 많은 공헌을 했다.

○ 북한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 것인데, 한국학자들이 어떤면에서는 유리하고 어떤면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선 한국학자들은 한글로 된 자료들을 독파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일차적 조건이 된다.

물론 "글린 페이지" 같은 교수는 한글을 습득하여 꽤 잘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책 한권 읽을적에 그들은 10 페이지 정도 밖에 읽지 못한다.

반면 한국학자들은 영어독파력과 발표면에서는 불리한 조건에 있다. 제 자신 미국에 17년간 살았지만 어릴때부터 미국에서 뼈까지 굶은 사람들 보다는 훨씬 못한다.

○ 북한관계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방법에 관해서 일별해 보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역시 북한에서 나오는 간행물들이다.

로동신문, 근로자, 조선중앙연감, 김일성 저작선집등이 있다.

어떤분은 홍콩과 일본의 서적상을 통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미국의 큰 도서관들, 예 들들면 국회도서관

관, 하바드 엔칭 "도서관, "캘리포니아" 도서관등에서도 꽤 많은 자료를 구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 구할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이들 도서관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이다.

-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자료라 할 수 없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관심의 쏠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권력 투쟁문제, 후계자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간행물과 신문만 분석하고서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다. 고위층의 귀순자, 망명자들의 진술이라던가 간첩에 의한 정보 수집등의 특수방법을 제외한 북한간행물만 가지고는 북한내부의 정치사정은 거의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현재 북한내부정치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 평가나 예측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내부정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내부의 문제점 같은 점이다. 예컨대 김일성의 연설문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또한 어떤식의 "캠페인"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요행사시의 서열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석자가 달라지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불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고 본다.
- 미국에 있어서 북한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면을 요약해 보면,

결국 일차적으로는 북한간행물을 주요자료로 보고 있으며 북한에 관한 다른 서적들을 참고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간행되고 있는 "북조선연구"는 인물동향등을 분석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외교정책이 본질적으로 쌍무관계이기 때문에 북피와 소련관계, 북피와 중공관계, 북피와 일본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을 파악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북피, 중공관계는 중공에서 간행되는 발간물이나 미국의 중공관계 전문지인 "페킹 리뷰" (Peking Review), 홍콩의 번역물들을 조사하여 북한관계에 대한 표현이나 감정이 어느 정도 어떤식으로 개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대외무역관계는 일본과 북피관계에서 일본간행물을 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본다.

- 그리고, 미국정부에서는 방송청취 번역자료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FBI's Policy Report) 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북경, 소련, 평양, 서울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방송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 대외정책면에서 또 한가지 분석방법을 소개하면, 발표문 등에 어떤 형용사,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표현하는가 또 인적교환은 어떤수준에서 하는가만

보고서는 사실상 본질을 판단하기가 용이치 않다.

○ 특히 대외관계상 큰 변화가 발생했을때, 예컨대 북괴와 소련관계에 있어서 1962 - 1964 기간중에는 소원상태에 있었는데, 1965년에 다시 화해상태로 복귀하여 70년도에는 다시 친밀관계에 들어갔다. 그 변화의 이유와 동기, 요소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상술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추리나 어떤 논리(Logic)를 사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가장 큰 의문점은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김일성이 혼자서 모든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에 대한 개인 우상숭배와 독점적 권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무원과 노동당정치위원회 등의 상급정책 결정기관에 대하여 관심이 높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상상할 수 밖에 없다.

○ 다음은 북한연구의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이 한때 미국에 있어서 북한에 관한 연구와 발표는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됨으로써 출판하기가 용이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다소간 "한불간" 느낌이다. 말하자면, 재미한국인

학자들이 북한만 전공으로 하다가는 "밥벌이 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다.

북한연구만 가지고 밥벌이 할 수 있는 학자는 한두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 서대숙 교수(하와이대학교 한국문제연구소 소장)가 장본인이다. 그밖에 이정식 교수(펜실바니아 대학) 같은 분도 북한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는 주로 한국민족운동사(3.1운동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에서의 한국학 강의는 남북한을 합해도 "코리아"라는 지역을 강의 독립 과목으로 설정하기란 힘든 형편이다. 그래서 제 경우는 한국과 일본을 합하여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강의제목은 Political Systems of Japan and Korea)

- 다른분들도 대체로 일본이나 중공관계를 주로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북한관계는 "일종의 부업" 비슷하게 강의하고 있다.
- 요즘 특히 새로운 관심은 역사적인 접근법이나 신문기사는 명치럼 서술적인 표현에 그칠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없느냐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는 결국 인간의 문제, 인간의 행위들 보는 것이므로 공산국가이든 민주국가이든 인간행위의 유형(Pattern of Human Behavior)을 찾아내어 사회체계에 관한

이론가설을 만들어 시험하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견지에서 북한만을 다룬 논문보다는 사회과학의 폭넓은 개념이나 가설에 입각한 북한관계 논문들이 논문발간 편집인들이나 출판사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지식을 넓히는데 이와같은 북한연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연구만을 하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다.

- 따라서 이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예컨대 북한의 교화과정 (Indoctrination) 만 하더라도 정치사회화과정 (Political Socialization), 정치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입장과 태도 및 열성도, 교육의 정점, 지도자들의 문제점 제시 뿐만 아니라 효과 (Apolitical Approach) 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도저히 알기 어렵다. 공개사회에서는 "인터뷰"나 "서베이"를 할 수 있으나 북한은 곤란하다.

물론 이런식으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북한연구를 보다 더 체계있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의도만큼은 꼭 좋으나 사실상 북한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고민거리인 것이다.



### 3. 질문 및 답변내용 (속 기록 정리)

질문 1 (정석홍) : 현재 국내 학자들이 개인업적으로 북한관계 책을 발간한 것이 거의 드문형편이다. 개인학자의 저서가 아니고 어느 연구소 명의로 북한관계 자료들이 발간되어 외국에 나갈 경우, 미국의 학자들은 과연 이러한 자료들을 어느정도 신빙성 있게 보고 있는가?

답변 : 이 문제에 관하여 다른 학자들 하고는 토의한적이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을 위주로 하여 설명한다면, 처음에는 다소 신빙성을 낮게 보아왔다. 왜냐하면 편견인지도 모르지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아무래도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약점과 단점, 또는 불리한 요소들에 초점이 집중되어 편견에 의한 발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차선 북한에 관한 자료들이 여러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게 마련이다. 다른 자료들을 다 분석하고 난후 그래도 궁금하면 어떤 새로운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여 한국자료들을 들추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유용한 자료들이 많다고 본다. 예컨대, 오래된 것이지만 반공교육강좌 형식으로 발간한

“북한편람”인가 하는 책자는 좋은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미국에서는 보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 제 경우와 같이 한국에 들릴수 있는 기회에 구해보게 되는 것이지 재미학자들은 일종의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미국간행물, 북한발간물, 일본발간물등)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 미국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일종의 Anti-North Korean bias (대북편견)를 가지고 집필하게 되면, 편집인은 왜 한국은 Republic of Korea라고 쓰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North Korea 또는 Pyong Yang Regime 으로 표기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차별대우다, 학자식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부르는 식으로 DPRK 라고 정식명칭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므로 논문한편에 한두번은 북괴의 명칭을 공식으로 써줘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

질문 2 (박종철) : 고병철교수께서 근무하는 연구소의 경우, 연간 얼마나 북한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또 미국회 도서관에는 어떤 종류의 북한관계 간행물이 얼마만큼 소장되고, 수집되고 있는지?

답변 : ○저희 학교에는 북한자료가 전혀없는 상태라고 할 수있고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은 직접 구입해 보고 있다. 개인  
돈으로 홍콩에 있는 서적상이 매년 보내주는 책목록표에  
의거 필요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 위 심튼 소재 국회도서관은 제 생각으로는 거의 북한관계  
자료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제일 중요  
한 자료인 "로동신문", "근로자", "조선연감"을 비롯  
하여 각종 단행본, 심지어는 국민학교 교과서, 각종학술지  
등 이북에서 해외에 내보내는 간행물은 거의 전부를 소  
장하고 있다.

○ 따라서 위심튼에 있으면 이북에 관한 자료는 여기에 계  
신 여러분들과 똑 같이 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귀순자 또는 간첩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입수하기  
곤란하다.

질문 3 (이영일) : 북한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라고 한다  
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가, 또 왜 그렇게 감격하며 환호하느냐 하는 이유를 분  
석할 수 있어야 북한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을 보는 관점, 즉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체로 북한을 보는 관점은 16개의 공산국들 가운데 하나가 북한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보이는 특징을 큰 가설모델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비교한 유사점, 특징, 상이점을 도출하여 변해가는 요소들을 엮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개인적인 시도를 해보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주민들이 왜 김일성이를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느냐하는 문제에 관한, 종교, 심리,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들도 북한자료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항일 빨치산 투쟁 회상기를 읽어본다면 우리나라의 신종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꼭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체로 북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가설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 : ○ 좋은 의견이다. 사실상 북한이 하나의 공산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타공산국가들의 특징, 유사점, 상이점만을 비교해 가지고는 본질을 파악하기는 힘들것 같다.

- 요즘경향을 보면 서대숙교수 같은 분은 북한을 "한국적인 면에서 보자"는 주장을 한다. 사회과학 이론과 개념, 공산주의에 대한 관점이 거의 전부가 서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중공까지도 서구적 개념으로 보아왔다) 그러한 논리를 한반도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었다.

한국적인 전통, 사고방식, 철학적인 측면에서 봐야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실제 적용하고 있는 자는 모른다.

- 그런데 이미 절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학자들은 북한연구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볼 때에는 어떤점에 있어서는 그들이 다소 "용공적"이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 한편 이정직교수 (펜실바니아 대학교수) 같은 분은 북한대생으로 자유대한으로 월남한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공에 철저한데, ... 다소간 반복적인 표현의 느낌을 주게 되면 미국학자들은 다시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스칼라피노" 교수와 공동집필한 책에 대한 서평들 가운데 제일 큰 비난의 하나는 너무나 반공적인 편견이 짙다는 것이었다. 실제, "2천 페이지를 읽어봐

도 이북이 좋다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다. 물론 저자들의 확신에 의하여 기술했는지는 모르지만, 정권을 30년간이나 유지해왔고, 또 경제는 큰 곤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준의 공업화를 이루어 놓았는데 한가지도 북한이 좋은 점이 없으리라고 없다"는 관점에서 이교수의 연구책자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 또 서대숙교수는 한때는 용공적인 학자라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사실은 용공적인 자가 아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난후 북한을 보는 눈이 백팔십도로 전환되었다.

김일성 우상화 실태를 직접 확인한 그는 크게 실망했다.

밖에서 보고 듣는 것과 직접 안에 들어가서 보고 듣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일성 우상화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나 집체조직화 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린애들에게 까지도 세뇌교육을 시켜 "아버이 수령님"이라는 말을 줄줄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했을때 같은 동포로서 비애를 느꼈다"고 서교수는 술회한 바 있다.

- 제가 보기에는 북한을 연구하는 재미학자들이 용공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만 편견이 있다면 반공적인

편견을 다소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질문 4 (송영대) : ○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대체로 세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체제접근법이고, 둘째는 행태론적 접근법이며

그리고 셋째는 내용 및 주제 분석방법이다.

○ 국내 학자들간에는 첫째와 둘째방법은 효용성이 있다 또는 없다는 문제를 놓고 논란되고 있으며 대체로 셋째의 방법, 즉 내용 및 주제분석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

○ 현재 미국이나 서방의 학자들간에는 소련이나 동구에 관한 연구방법론이 상당히 개발되어 왔다고 보는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혹시 북한문제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은 없겠는지?

○ 또한 고교수의 연구경험을 통해서 볼 때, 북한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답변 : ○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 보겠다. 미국의 경우, 행태학적으로 보려는 학자들이 많다. 저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조사 자료가 없고 피지배자들의 태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 북한을 하나의 개발사회로 보고 개발모형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논의도 있는데 이것은 공산국가들의 모형을 비교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을런지도 모른다.

예컨대 중국이 소련과 특히 다른점은 소련보다 중공이 저차원의 개발사회로 출발함으로써 인한 문제점 또는 중공특유의 모택동 사상에 의한 특수 개발방법에 관한 분석을 함으로써 중공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에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북한과 중공을 비교 연구하는 것인데 이는 공산국가들 비교하는 것도 되고 개발사회들 비교하는 것도 되며 또한 같은 동양사회들 비교하는 것도 된다.

그리고 양쪽의 전통적인 정치문화는 (유교사상등)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하면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76년 3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열린 아시아학회에서 본인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발표논문제목 : Korean Communism in Chinese Per-



spective )

○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일반적인 대답은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 보다는 개방주의로 통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연구경험에 비추어서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 나는 김일성 유일사상관계를 연구해 본 적이 있다. 김일성 자신이 독창적인 논리는 어떤 것이며 남에게 빌려온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비교 검토한 결과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일성의 유명한 논문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1954년도)라는 주체사상에 관한 논문내용을 모택동 사상과 비교결과 그것은 모택동이 언급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복사판 같은 것이었다. 주체사상을 강조한 논문에서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또 재미있는 것은 김일성은 어학능력이 약하여 일본어는 모른다는 사실이다. "세카이"잡지 편집장과의 대담 내용에서 김일성은 "세카이"잡지 번역판을 매달 본다

고 말한바 있다.

( 1971. 10. 20 )

○ 그러나 김일성은 중국어는 능통하다. 중국사람보다 말을 잘하여 조선사람인줄 모를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에 관한 자기공부를 위하여 김일성은 주로 중국서적을 읽어왔고 또한 읽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물론 모택동 사상을 탐독했을 것이 틀림없다. 결국 김일성사상은 모택동사상에 제일 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질문 5 (양재도) : 뉴욕에 또 한사람의 "고병철" 교수가 있는 줄 안다. 이차리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고병철 교수님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뉴욕의 고병철 교수의 연구방향과 오늘 주제발표자인 고교수의 연구방향을 비교하여 소개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 : ○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반공의식 때문에 시카고의 고병철 (본인) 을 뉴욕의 고병철씨로 오해하여 저를 만나기를 꺼리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 사실상 뉴욕에 있는 고병철씨는 교수가 아니다. 즉 학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는 연구논문 한편도 발표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좀 정치적인 사람이고 쇼를 좋아하고 이복에 두 차례나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자로써 과장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는 로동신문에 게재된 김일성과 찍은 사진을 지니고 다니면서 보여준다고 한다.

- 따라서 학자도 아닌 고병철씨와 학자인 고병철 교수의 연구 방향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질문 6 (백낙서) : 재미한국인 학자들 가운데 국방성이나 국무성과 계약을 맺어 1년 또는 2년간 연구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또는 근무기간중 한국문제에 관한 비밀자료나 관계사항을 어느정도 지득할 수 있는지?

답변 : ○ 요즘에는 1-2년전보다는 기간을 아주 짧게 잡아서 몇 주정도로 하고 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활용하고, 또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견지에서 기간을 단축시킨 것 같다.

Scholar Diplomat Progra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East Asia Program, Africa Latin America Program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미국학자들도 관심이 높아 경쟁율이 치열하다. 한국인 학자들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

국방성에는 몇년씩 제신분들이 있다.

- 국방성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국방성 산하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사립연구단체 같지만 사실은 국방성 기관이나 다름이 없는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 한국인 학자들이 많이 있다.

- 한국인의 경우 Scholar Diplomat Program 에 응모하여 원서를 낼 경우 신원조회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된다. 이 경우 국무정보보다 국방성이 더 엄격하다.

질문 7 (박일성) : 혹 북한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이질성으로 이해에 불편한 점 같은 것을 느낀일은 없는지?

답변 : ○ 물론 처음 북한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을것으로 본다.

- 제 경우는 65년도에 워싱턴에 갔을때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호기심에서 북한자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간행물 특히 노동신문을 상당히 많은량을 처음부터 차례차례 대충 독파해 나갔다. 그러나 별로 고충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러나 말이 격하고 딱딱하며 언어의 이질화현상에 대한 인상은 많이 느꼈다.

질문 8 (박일성) : ○ 그런데 외국기자 (일본, 미국) 들의 경우 북한의 특수 언어개념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겠지만 사실과는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알곡"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통상 한국에서는 "정곡"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북조선" 잡지 기사가 쓴 것을 보니까 알곡의 개념을 백미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200 만톤쯤 수출하고 100 만톤쯤은 비축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

- 이와같은 사례는 권위있는 북한문제 전문가가 그렇게 잘못 해석해 버리면 사실상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답변 : ○ 그런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북조선" 과 같은 잡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북한연구 자료의 한 출처일 뿐이지 중요출처라고 보지 않는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충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년전 제가 일본방문시 "북조선"잡지사의 기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당시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완전히 일본사람이라고 들었다. 그중에 한사람은 연세대학에 유학 와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창하게 했다. 또 한사람은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그 기관에 취직했다고 들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써 북한을 연구하면 언어상의 불편과 오해는 있을 것이다.
-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간행물을 보더라도 주로 영자간행물을 보는데 "평양타임스" (주간)의 경우 "그레인" (Grain) 과 "라이스" (Rice) 를 분명히 구별하고 쓰고 있다.

질문 9 (박일성) : ○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괴는 해외에 발송하는 북한간행물이나 해외 발표문은 심리전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 그렇다면, 심리전적 요소를 가미한 것하고 정상적인 것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답변 : ○ 예컨대, 경제에 관한 통제는 처음부터 과장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인정하고 들어간다. 정상원씨 같은 북한 경제전문가는 ( 일리노이공대연구소) 숫자로 그 폭을 계산

하여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과장의 폭을 가려내고 있다.

○ 그리고 이봉석교수 같은 경제학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제 통계를 재 분석 평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북한의 발표내용과 이러한 재평가내용을 동시에 참고 하고 있다.

○ 그리고 북한은 너무 과장을 많이 하고 "위대한 수령"만 찾기 때문에, 그런것을 읽고 기초가 있는 지식인들이 속아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선전술이 유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예컨대, 컬럼비아대학의 "레저드" 교수 같은 이는 인권문제 등으로 한국에 비판적이고 북한에 다소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북괴가 너무 "수령"만 찾기 때문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 그리고 "뉴욕타임스"지에 몇만불 광고비를 들여 선전해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 또 광고국에서는 귀찮으니깐 북한이 내어놓은 원문을 틀린것을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기 때문에 영어문장 내용이 형편없다.

○ 제가 보기에는 북괴의 대외선전이 제대로 효과를 얻고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평양을 다녀온 학자들 (하바드대학의 코헨교수등)의 방문기를 보더라도 대체로 비판적이다.

○ 김일성을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소국의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지배방법도 혼자만을 통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경찰, 주민들을 바쁘게 만들고, 그 체제에서 낳고 자란 1/3의 세대들은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비판적인 능력이나 상황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체제비판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 10 (박준홍) : 북한에서 발행되어 외국으로 발송되는 영문간행물 중에는 번역이 틀린 경우가 많다.

고선생이 북한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혹 북한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표현이라던지 오역같은 것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 : ○ 제가 비교적 자세히 비교해본 것은 2년전 일본의 \*마이니찌\* (毎日)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인데 그 전문이 일어로 게재되었고, \*평양타임스\*지에 영어로 게재된 바 있다. 물론 노동신문에는 한글로 된 전문이 발표되었다. 그렇게 중대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영어전문이나 일어표현에서는 다소 삭제된 것이 있었다.

○ 대체로 북한에서 나오는 영문간행물들이 질이 아주 나쁘다. 영어실력이 나쁘기 때문에 어떤단어는 사전에도 없는 것을 사용한 것도 있었다. 예컨대, \*노동계급화\*를 Working



Classification 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표현은 Proletarianization 으로 해야 말이 되는 것이다.

- 제가 보기에는 표현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감추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질문 11 (차관) : 미국에서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몇개를 들 수 있는가?

답변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문적으로 북한만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문 12 (차관)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저명한 교수들중에 북한문제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북한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인가?

답변 : ○ 재미 한국인 학자로서는 서대숙교수와 이정식교수가 쌍벽을 이루고 있다.

- 미국인으로는 "글린 페이지" 교수 (하와이대학)가 초기에는 지대한 공헌을 했으나 최근에는 "코리아" 문제는 취급안하려 하고 있다.

그는 정치지도력 (Political Leadership) 부문에 관심을 전환함으로써 주로 이론적인 면의 연구를 하고 있다.

- 그 밖에는 “스칼라피노” 교수가 이정식교수와 함께 북한문제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스칼라피노” 교수도 비록 한국어는 못하지만 일본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김일성선집 일어판도 읽고 일본어 자료들 많이 봄으로써 상당한 북한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정식교수와 공저로 출판한 책의내용을 출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 의뢰 받은 적이 있는데 “스칼라피노” 교수의 집필부분도 예상외로 많았고 내용도 충실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현재 미국학자들중 북한문제에 가장 조예가 깊은 사람은 “스칼라피노” 박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질문 13. (차관) :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미국학자들, 예컨대 “스칼라피노” 교수의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으며, 어떤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 : ● 제가 “스칼라피노” 교수댁을 직접 방문하여 서재를 본 적은 없다.

- 그러나 추측컨대 일본서적과 영어판 자료집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큰 필요가 있지 않는 한 대학교수 박봉에 북한관계 서적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이 방대한 북한관계 서적과 자료를 구입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14 (차관) : 그러면 미국학자의 경우 한글로 된 북한관계 자료들을 어떤 방법으로 소화하는가?

답변 : 캘리포니아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을 의뢰하여 본다.

질문 15 (박일성) :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나 국무성, 국방성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답변 : ○ 신원조회가 끝나고 비밀취급 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신중한 자료들이 없다.

○ 귀순자 또는 망명자들의 정보나 신문조서 같은 것들은 참고가 될만 하다고 본다.

질문 16 (차관) : 끝으로, 만일 고병철교수가 한국에서 30여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팀을 주도하여 북한연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답변 : ○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제 소견으로는, 우선 북한에서 나온 각종자료를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제일 먼저 북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서책들은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 등 외국자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책자도 다각적인 관점(친북한 기자, 또는 학자들의 글도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음)에서 분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 이와같이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한 바탕위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유치원, 국민학교 교과서 부터 사상, 교육, 문화, 경제, 정치 외교등 전분야에 이르기 까지 분야별로 나누어 분업화하여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 그리고 난 후에 판단과 추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民族統一大計研究의 設計圖 作成問題

THE UNIVERSITY OF CHICAGO



## 目 次

1. 一般事項	79
2. 討議内容 要約	80
3. 討 議 録	84

天 日

07

興 隆 號

08

廣 益 號

09

德 泰 號



1. 一般事項

가. 日 時 : 76.10.27 ( 午 ) 14:30-18:00

나. 場 所 : 當院 狀況室

다. 主 題 : 民族統一大計 研究의 設計圖 作成問題

라. 施行官 : 政策企劃室 第1 担当官

마. 參席者 : 15 名

(1) 特別參席 : 董 勳 ( 次官 )

(2) 外 部 : 金 應 ( 外大教授 )

朴東雲 ( 韓國日報 論說委員 )

朴庸玉 ( 陸士教授 )

鄭鎔碩 ( 東亞日報 論說委員 )

趙在權 ( 建國大 教授 )

安秉永 ( 延世大 教授 )

李相禹 ( 西江大 教授 )

(3) 院 內 : 韓英哲 ( 政策企劃室長 ) , 宋榮大 ( 第1 担当官 )

尹瓊泰 ( 第2 担当官 ) , 朴鍾徹 ( 第3 担当官 )

朴一聖 ( 常任 研究委員 ) , 梁榮植 ( 政策企劃室補佐官 )

官 )

金炳璘 ( 政策企劃室 補佐官 )

마. 司 會 : 宋榮大 ( 第1 担当官 )

바. 記 錄 : 金炳元 ( 第1 担当官室 勤務 )

## 2. 討議內容 要約

### 가. 討議方向

- (1) 民族統一大計研究의 設計圖作成指針摸索
- (2) 設計圖에 包含되어야 할 考慮要素
- (3) (未來狀態 豫測에 必要한) 狀況變數의 糾明과 그 測定要領
- (4) 統一政策推進에 있어서 使用可能한 政策手段
- (5) 設計圖作成時 隨伴되는 問題點 및 打開方案 檢討

### 나. 討議內容 要約

#### (1) 民族統一大計의 性格

(가) 民族統一大計는 統一院의 憲法에 該當되는 것이다.

(나) 民族統一大計에 관한 事業

○ 民族統一方法에 있어서의 過程과 當爲에 관한 本格的 構圖 作成

○ 民族統一大計 研究自体를 위한 根幹의 構築

#### (2) 民族統一大計의 設計圖作成 指針 (統一政策樹立에 必要한 知識)

및 設計圖에 包含되어야 할 要素

(가) 必要한 知識 發掘을 위한 基本 틀과 構圖부터 만들것

(나) 現實과 理想的未來를 擘擘나갈 政策導出을 위한 具體的 段階区分設定

1) 未來狀態에 대한 目標達成

2) 現實에 대한 正確한 分析

### 3) 未来豫測

(가) 研究設計은 段階的으로 区分하여 研究範疇를 定해야 함.

1) 1 段階研究 : 政策目標,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政治体制, 北韓과의 妥協限界, 南·北韓의 政治, 經濟, 軍事力量分析; 三國關係 시스템과 構造把握, 南北韓統一政策分析, 南北韓交涉史, 南北韓刺戟 - 反應 모델研究, 등이 包含되어야 함.

2) 2 段階研究 : 우리의 統一政策 全般이 움직여가는 시스템 모델作成, 시스템 디스크립션 (System description), 未來의 시스템 디스크립션, 變數間 연계 把握研究, 크로스임팩트 (Cross impact) 모델研究, 下位體制別 시뮬레이션 모델 (Simulation model) 開發 이러한 研究의 結果 政策 모델作成, 政策모델別 長短點分析이 可能해지고, 政策案, 즉 行爲프로그램作成이 可能해짐.

(나) 統一理念이 研究의 序頭에 나와야함.

統一政策史 같은 近百年의 우리歷史속에서 民族的課題를 抽出해 내는 作業이 必要하며, 民族史의 正統性에 立脚한 民族機軸思想의 摘示가 必要하다.

(다) 民族統一大計 研究作業에 參加할 學者는 政治學者, 國際關係學者外에도 歷史學者, 憲法學者, 教育學者, 哲學者, 社會學者, 心理學者等 廣範圍한 여러分野의 研究者의 參與가 要望됨.

(바) 우리 發想法대로만 理論展開를 하는 傾向을 止揚하고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發想法도 研究해서, 그것을 우리편에 誘導, 利用하는 方法論도 提起되어야 할 것임.

(3) 未來狀態속에 必要한 狀況變數와 測定要領

○ 南北韓狀況變數중 가장 基本的인 것은 力量의 比較問題임.

(가) 南北韓 自体内的 国力比較

(나) 中·蘇·北韓이 同盟體制로서 갖는 國力과 美·日·南韓이 同盟體制로써 갖는 國力の 比較

(다) 이 두블럭의 對決時 第3勢力이 어느쪽에 有利하게 作用할 것인가의 問題도 主要狀況變數임.

○ 內容分析 (Content analysis), 模擬 (Simulation), 要因分析 (Factor analysis) 등의 方法을 통해 相互作用하는 要因들을 測定可能할 것임.

(4) 統一政策推進에 있어서 使用可能한 政策手段

(가) 統一指向的 條件形成을 위해 機能主義的 面에서 南北韓交流를 促進시켜주는 것이 重要함.

(나) 그러한 拠点形成은 社會經濟的 側面으로써 社會的階層構造에서 양쪽에 欲求하는 바가 어느程度 收斂될 수 있는 어떤線 上에 確立, 均衡의 社會階層構造의 形成은 매우 좋은 基礎이 될 수 있을 것임.

(5) 設計圖作成時 隨伴 되는 問題點 및 險路事項

(가) 이데올로기상의 問題點 및 險路事項

- 1) 統一의 理論的 바탕을 勝共에 둠으로써 統一理論의 研究와 理論展開를 事實上 단조롭고 制限된 것으로 만들었음.  
이는 體制上의 問題로써 當分間 宿命的 險路點이 될 것이다.
- 2) 北韓의 統一政策이 赤化統一로 굳어져 있는한 統一政策 立案者들은 北韓에 대해 不信을 갖게되며, 이不信은 北韓 研究者들로 하여금 統一研究에 必要한 假說定立을 어렵게 함. (統一政策研究가 脫現實的, 理想的, 超未來指向的, 空論에 그칠 危險性도看過할 수 없음)
- 3) 反共法의 法的規制에 따르는 論議의 制限性과 北韓資料의 相對的 稀少성도 險路事項의 하나임.

(나) 方法 및 技術上의 問題點 및 險路事項

- 1) 統一研究모빌設定에 있어서 經驗的論理보다는 先驗的 研究方法으로써 接近해야하는 問題點
- 2) 北韓研究實績의 未備와 體界의 研究集積의 欠如
- 3) 外部勢力의 變數展望과 對內關係의 變數가 統一에 미치는 有機的 變化에 대한 分析未備
- 4) 統一理論 土着化의 必要性
- 5) 形態論的 接近은 組織的, 體系的인 點에서 利點이 있으나 그것을 判斷, 推理해내는 主管者는 사람아므로 作成者의 認識, 先入見, 教育, 知的水準에 크게 左右되므로 注意를 要함. (敎理的, 科學的 方法에만 置重하다 보면, 人間의 倫理性, 南北韓問題에서는 同族愛, 民族性등이 排除될 憂慮가 있음)
- 6) 統一의 雰圍氣造成을 위한 教育的接近의 必要

### 3. 토 의 례

차 관 : 민족통일대계는 우리 통일원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민족통일대계에 관한 사업은 두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전제가 되는 것으로는 남쪽에 사는 우리가 장래에 이룩할 민족통일에 대해, 어떤것을 무슨방법으로 해결 것인가 하는 그 과정과 당위에 관한 본격적인 구도를 그리는 것이며,

둘째, 대계를 성취시키는데 필요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즉, '어떻게'에 관한 줄기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어렵고 엄청난 과제이나 서둘렀으면 하는 것과 통일대계에 관한 체계적 기틀이 먼저 잡히고 그에 의거해서 각 연구가 전개되도록 먼저, 통일대계의 "틀" 작성부터 할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 회 : 오늘 세미나의 취지는 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7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통일에 관해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 70년에 평화통일 9.3 선언

○ 71년에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와 남북조절위원회 개최

○ 73년 6.23 평화통일외교 선언

○ 74년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선언등 이런 제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구체화시킬 중,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기본전략이 마비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문제와 관련된 인접분야, 외교, 심리전, 남북대화등 제분야간에 상호밀접한 관련성이 부족했었다.

이런 문제의식, 자기성찰에서, 늦은 감이 있으나 이 사업에 착수했으며 '76년말까지 연구설제도작성에 치중할 것이며 내년 1년간 본격적연구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 민족통일대제연구의 설제도작성 지침부터, 예컨대 통일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것등을 얘기해 주기 바란다.

이상우 : 통일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 구성할 것인가 필요한 지식발굴을 위한 기본 "틀"과 맵(map)부터 만들어야 하며 우리가 통일정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되어질 설제도가 어떤 형태로 되어질 것인가를 정해야할 것이다.

○ 정책이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작업인데 미래는

- 1)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상태로써의 미래
- 2) 그냥 방치해둬도 되어질 미래의 두가지가 있다.

정책이란 현실에서 출발해서, 내버려두면 흘러갈 미래상태와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이상의 상태, 이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구체적인 행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현재상태로부터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

기 위한 구체적 단계로써

첫째, 미래상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목표설정이 필요하고

둘째,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셋째, 미래에 대한 예측

이 셋이 합쳐져야 구체적으로 그 사이를 메꿔나가는 정책이  
도출된다.

○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할 것은 우선 규범적연구가  
있어야 한다. 즉, 앞으로 이루어질 상태에서외 정치이  
념, 정치체제, 사회경제체제등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구  
체적으로 정할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하며, 그 다음  
으로 현실분석이 필요하다.

현실분석을 할려면 두가지에 관한 고려가 필요한데, 정  
책요소와 전체시간「프레임 ( frame )」이 그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힘자체는 한국의 주체능력이니까 한국  
의 주체능력자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하며, 북한의 체  
제능력에 대한 연구가 또한 필요하며, 이들을 합치면,  
남북한의 역량비교가 가능해 질 것이고, 그 다음으로  
국제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통일문제가, 어떤 진공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  
니라 남북한을 포괄하는「리지오날 시스템」( regional  
system )이있고, 이 리지오날「시스템」을 포괄하는「그로



벌 시스템]( global system )이 있는 것이므로 서로의 「인터액션( interaction )과, 이러한, 정책 환경으로써의 국제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한정책이 통한 정책에 중요요인들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독자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한국의 주체능력과도 유관한 것이다. 우리의 주체능력이 늘면 거기따라 미국의 대한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한편, 미국의 대한정책이 바뀔에 따라 우리의 주체능력이 늘기도하고 줄기도하는 것이다.

○ 연구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하로 나뉘어야 할 것이다.

1 단계부터 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그다음 단계의 연구가 가능하므로 순차적 연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 단계 연구로는, 정책목표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정치체제, 북한과의 타협의 한계,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역량분석, 또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역량, 3국관계 (한 . 미 . 일 . 중 . 소 . 북한) 등의 「시스템」과 구조파악, 남북한 통일정책분석, 남북한 교섭사, 남북한 자극 - 반응모델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러한 1 단계연구를 토대로, 다음 2 단계연구로는, 우선 우리 통일정책전반이 움직여가는 시스템 - 모델작성을 해야 하고,

○ 「시스템」- 디스크립션]( system-description )

○ 미래의 「시스템 - 디스크립션」( 예컨대 미래 10 년후의 )

- 변수간의 연계파악연구
- 「임팩트 플로우」( impact flow )의 하위체제연구
- 「크로스 임팩트 모델」( cross impact model )에 관한 연구
- 하위체제별 시뮬레이션 모델( simulation model ) 개발 등의 연구가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책모델작성이 가능해질 것이고, 정책모델별 장단점분석이 되어질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되면, 그 결과로써 정책안, 즉 행위프로그램작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연구의 순서를 정해서 이런식으로 조합하면 연구설계도가 될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반이상은 통일원의 자체연구나, 연구자들의 개별적 연구가 이미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한데 묶어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고 본다.

박동운 : 통일이념이 혼돈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학에서는 목적, 목표를 먼저 정립하며, 박대통령께서도 통일에의 장·중·단기 목표를 연구해보라 하셨듯이 통일이념이 연구의 첫머리에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이념엔 미래상 설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상의 설정은 세계관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관은, 자연과 사회를 보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견해의 총체인데 이것이 정리되어야 하겠고, 세계관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구절권하등 과거에는 유엔의존식통일론이 정부지도자등에 의해서도 공공연히 제창되었으나, 지금은 유엔의존식통일론의 제창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남북한 통일정책을 비교해 볼때 북에는 일관된 체계화된것이 있는데 비해 우리는 갈팡질팡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를 논하는 항목을 설정할때는 일종의 역사적안목에서 통일정책사같은 근백년의 우리 역사속에서 민족적과제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 국가, 정부적차원에서 이러한 작업이 지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백년에 걸치는 민족의 수난, 우여곡절속에서의 국가적과제를 추출하고, 국사적과제의식을 정립해 놓아야, 거기서 연결되는 것으로 민족사적정통성문제가 나온다.

통일주체로서의 우리 입장을 천명하고, 자신감을 갖게 할려면 국사적과제의식을 정립하고 민족사적 정통성문제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논할때는,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

각한 민족기축사상이 무엇인가를 적시(揭示)해야 할 것이다.  
가령 서구의 경우는, 기독교전통 「헬레니즘문화」 「르네상스」의  
「휴메니즘」, 자유중국의 경우는 3민주의, 이슬람국에서는 회교  
사상, 중공의 경우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모사상등이 있는데, 우  
리의 경우 민족종교도 뚜렷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축사  
상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본 명치유신때 많은 학자, 연구자들이 토의한것이 있는데,  
그때 일본의 기축사상에 대한 요구가 제시됐다. 그래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내세웠고, 그것이 근대화의 이념적 정  
열의 원천인듯이 내세웠다.

우리도, 북한사람들까지 깨우쳐서 이거다하는 설득력있는 통  
합사상이 하나 설정되어야지 이것의 설정없이 민족통일대계  
를 논할수는 없다.

○ 전략면에서 볼때, 통일문제는 방안보다 조건형성의 문제이다.  
통일이 왜 안되는냐는 적당한 통일방안이 없어서가 아닌것  
이다.

조건이라면 주체적조건으로 경제성장, 근대화작업추진등으로  
자신획득이 많이 됐으나 종래에는 민족자학책 자진항일의  
풍조가 많았었던 것이다.

객관적조건으로는, 국제환경의 정비와 직결되는 첫봉황 들수  
있을 것이다.

조재관 : ○ 통일이란 과제를 두고 남북한주민들의 의견과악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계층의 몇%정도의 사람이 통일을 원하는가, 혹은 원하지 않는가하는 자체층별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의견과악은 직접조사할 수는 없으니, 통일에 관해 국민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대학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통일에 관한 그들나름대로의 연구가 있을 것인데, 그연구의 내용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이론전개를 하는가하는 간접접근은 가능할 것이다.

- 요인에 관한 접근으로 국내, 국외 요인으로, 통일저해요인과 통일조성요인에 관한 조사 리스트작성을 필요로 할 것이고,
- 기축사상확립에 관해서는 소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해 보는것도 좋을것이다.
- 전략면에서는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 칠것인가하는 것으로 이념적인데서 하기보다 경제측면에 중점을 두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 누가 옳게 보이도록 부각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선전의 문제으로써 현실성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상론적으로 말하면 정통성논리에 국사적 뿌리를 발굴해 내는것등 장기적 작업을 필요

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용석 : ○ 이미 정부는 통일대계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위에 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승부와 타협, 둘중에 승부문제로 귀착이 되고 마는데, 통일은 타협없이 불가능하다고

불진데, 정부가 내세운 민족사적 정통성은 통일을 스스로 처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무시하고 나가다가는 자칫 김일성식 통일론으로 곡해되기 쉬운것이므로 이점에 대해 깊은 구별을 요한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양보하기는,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체 제조건하에 있으니 이걸 그대로 놔두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논리적으로 전태감에 있어서 부차적으로 따르는 문제를 솔직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부차적문제란, 통일이 북한으로 부터 어떤반대를 야기시킬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상황 때문에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하며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어떤 중립적차원이나, 장기간에 걸친 통일에의 접근등을 덧붙여 설명해나가지 않으면, 통일자체의 연구가, 상당한 한계에 이르게 되리라 본다.

안병영 : ○ 미래상을 생각해 볼때 미래에 대한 관리는 중요문제인데 미래상 설정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선에서 논의하면 실효성이 없어진다. 공무원들을 훈련시킬때는 필요한 리콰이어먼트를 설정하고 현재의 상태를 알아서 그 간격을 메꿔줘야 하는 것인데, 전혀 이룰수 없는 리콰이어먼트를 설정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우선생이 얘기한 타협의 한계 같은것이 우리문제의 논의에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 이념과 크게 괴리안되면서도 저쪽과 타협해서 어느선까지면, 통일이 가능하고, 우리 뜻대로 되는것은 어느선까지인가하는 것으로 이에 관해선 거의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

그걸 위해서는 공동의 연구,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며 정치학분야 외에도 각분야의 연구자가 참가했으면 한다.

- 그다음; 통일에 관한 태도에 관한것으로 국민의 의향을 알아보고, 우리가 원치않는 어떤 반향일 경우에는 교정을 시킬 필요까지 있는 것이다. 즉, 교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문제가 크게보면, 민족주의적 차원도 강하고 현실정치적 차원도 강한데, 정부가 통일정책을 종포할 때마다, 들을 엇갈리게 하므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

게 만들어 왔다..

민족주의적 상징은 거의 손도 안대다가 별안간 7.4공동성명 같은것을 발표해서 국민들이 통일이 곧 될것같은 생각이나 이상적인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가 일이 잘 안돼니, 현실정치 차원에서 설명해 버리므로써, 완전히 반전해 버리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태도나 의견을 조사해봐도 그것이 바람직한 입장이 아닐 가능성도 많고 그걸 기준으로 정책을 세운다는것도 오류를 범할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책적 행위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는, 장기적 조망에서 우리가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정책담당자만이 아니라, 국민도 같이 합심이 돼서 움직일수 있도록 하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조재관선생이 지적하신 거점형성, 즉 요람을 통해 뭔가 확산시키는 점을 지적했는데 기능주의적면에서 남북한 교류를 이어주는것이 통일지향적 조건형성에 중요하다. 예컨대 경제측면을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발전, 경제의 자재능력 보강이 중요한 것이며, 남북한의 경우 통일된 상황을 지향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사회적계층구조에서 뭔가 비슷한 틀, 양쪽에서 욕구하는 바가 어느정도 수렴될수 있는 어떤선이 마련되어야하고 마련될수도 있는것이 아닐까 한다.



형평적 사회계층구조를 마련하면, 매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를 거점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면들이 거점형성의 관점에서 고려돼야한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사 회 : 이번엔 좀 초점을 좁혀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 설계도작성시 고려해야할 상황변수나 측정요령에 관한 것부터 토의하도록 하자.

박용욱 : 규범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써,

- 북한의 정세판단 및 예측
- 통일전략작성을 위한 기본자료분석에 관한 얘기를 하겠는데,
- 북한의 정세판단은 상호작용의 패턴도 봐야겠고, 오퍼레이팅의 원리가 뭐냐하는 것이 남북한 둘사이에서도 나타날 것이겠고, 주변국관계에서도 나타날 것이겠고, 국제사회전체를 시스템으로 본 것에서도 나타날 것이겠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전략면등에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다.
- 우리가 자료분석, 경험적 연구등을 할때, 기존에 포출된 수치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나 통일문제연구에 있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해야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들을 새로이 조합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뽑아내는 식의 자료처리가 되어져야겠다는 것이다.

- 남북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량의 문제인데, 국력의 분포 양상비교는 남북한 자체내의 국력비교도 필요하나,

- 1) 소, 중, 북한이 동맹체제로써 갖는 국력
- 2) 미, 일, 남한이 동맹체제로써 갖는 국력의 비교점도
- 3) 기타 제3세력이 이 두 블록의 대결시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등도 상황파악에 중요한 점들이다.

- 그리고, 내용분석, 시뮬레이션등의 방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변인들을 측정할수도 있을 것이다.

로컬 중심으로 자료를 뽑아낼때,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긴장추정에의 변인들로는 외교문제, 유엔에서의 행동선전, 보복행위등이 있으며 더 강도가 깊은 것으로는 군사력, 부대이동, 동원령, 무장충돌등을 들수 있겠다.

그리고 자체내의 긴장도 있으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긴장도 있겠는데 이러한것은 간접추정을 해야할 것이다.

김병린 : 상황변수들을 따질때, 변수가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다른요소와 변수들을 지배하는 지배적 변수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박용욱 : 지배적 변수가 뭐냐는 것은 「인디케이터( indicator )」 선정문제라고 본다. 국력비교, 상호작용등을 따질때 지배적변수가 있을수 있으며 어떤 한변수에 의해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받는 이 변수를 인디케이터로 뽑아내는 작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요인분석 방법이다.

사 회 : 그림 설계도 작성시 수반되는 문제점, 애로, 타개방안에 관하여 해 말해주시기 바란다.

정용석 (1) 이데올로기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2) 방법 및 기술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1) 에 있어서

- 통일의 이론적 바탕을 승공에 두었으므로, 이는 통일이론의 연구 결과를 단조롭게 했고, 연구와 이론전개를 실상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적이유로 이것은 당분간은 숙명적 애로점이 될 것이다.

문제점으로 제기할 것은 이 숙명적 애로점을 타개해야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타개하지않는한, 통일대계란 것은, 개미췌바퀴

도는 식의 제한된 순환을 되풀이하기 쉽다.

○ 북한의 통일정책이 적화통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에 대해 불신을 갖게되며, 이 불신은 북한연구자들의 통일연구에 필요한 가설정립을 어렵게 한다.

○ 그것은 북한의 통일정책이 타협에 의하기 어렵고, 다만 적화통일에만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한 대응적 가설도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 북한의 통일정책이 적화로만 굳혀져 있으므로 해서 결국 우리가 연구해내는 통일정책이란 것이 탈현실적, 이상적, 초미래지향적인 공론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 남북한 이론 가간의 의견교환등이 실상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계적이유때문이나 어떤기회가 주어질다면 방법론적 전개를 위해 남북한간의 전문가적 합석, 자료교환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 반공법으로 인해 논리의 전개가 크고 제한받고 있고,

○ 북한자료가 폐쇄되어 있다.

(2)에 있어서

○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립, 분열된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역사적 선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지역적, 민족적 분열은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으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와같은 분단과 대립은 선례를 찾기가 어렵다.

통일연구모델 설정에 있어서 경험적 논리를 못찾고 선형적  
툴 ( tool ) 로써만 접근해야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 북한연구의 실적이 미비한 현실이며 통일대계연구를 위해서  
는 북한연구의 체계적연구집적을 요한다.
- 외부세력의 변수전망과 대내관계의 변수가 통일에 미치는  
유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
- 통일이론전개에 많은 학자들이 특히 전례가 없는 케이스들  
을 다루므로 인해 서구학자들의 논리를 도입하고, 특히 동  
서독의 예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것은 동서독이 통일을 완  
료했다기보다, 다만 우리보다 이문제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  
기 때문에 그런류의 모델을 유추해내려는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 켈만족과 한민족의 민족성이나 주변상  
황은 다르므로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의 통일이론의 토착화  
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론상의 문제로, 행태론적접근법과 역사론적접근법등이 이번  
토의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체계분석, 게임이론, 내용분석, 시뮬  
레이션 어프로치등 통계를 이용한 행태론적접근법은 남북한  
문제처럼 복잡, 방대한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그런문제를 체계화, 조직화, 객관화시키는데 기여한다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할것은, 이런 행태  
주의과학, 행태론적접근은 조직적, 체계적인 점에서 이점 ( 利  
点 ) 이 있는것이 사실이나 그것을 판단, 추리해내는 주관자

는 사람이란것,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의 인식, 선입견, 교육, 지적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할수 있으므로 이 어프로치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수리적, 과학적 방법에만 치중하다 보면 인간의 윤리성, 남북한문제에서라면 동족애, 민족성등이 배제된다. 남북한문제에는 동족애, 민족애등이 유무형적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간과하고 다만 수리적방법에만 치중해서 다루어서는 곤란할것이란 것이다.

○ 통일의 개념설정이 아직 불안정하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은 종래의 정치적, 인종적, 영토적, 분단과는 다르다. 이런 특수상황에서는 통일의 개념설정작업의 재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 통일의 분위기조성을 위한 교육적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멀고, 다만 이상적으로만 목적을 세울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국민이 통일에 대해 자신을 잃고 통일의 가능성에의 희망을 잃기 쉽다.

민족통일대제수립계획속에는 국민들로 부터 통일에의 관심을 유도해 내는것, 통일에의 의욕상실을 줄이고,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만든다는것등의 문제점도 고려해 넣어야 할 것이다.

박동운 : 상황변수 및 측정 요령은 우리가 민족통일대제를 만들때 그 책의 장, 절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에서의 인간심리의 비합리적 측면이라는 요인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방법론을 갖고 논란을 거듭함은 별 수확이 없을 것이다.

- 민족통일대제연구 작업에 참가할 학자는 정치학자, 국제관계학자외에도 역사학자, 헌법학자, 교육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등 광범위한 여러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해야할 것이다.

김 덕 : 한국통일문제연구라하면, 종래 주변 4강 관계연구 정도에 치중하다 시간 다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북의 행태를 보면 외부정세와는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연구를 좀더 중점적으로 한반도 내세관계에 치중했으면 좋을것으로 본다. 한반도 내세에도 이미 국제적요인이 투입되어 있는것으로 상정하고 있는것이나, 언저리만 들지 말고 핵심을 파고드는 연구가 요망된다.

- 현재의 체제상의 문제등으로 인한 연구의 한계문제로 어디까지 연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연구할 수 없고 한 연구의 기본적인 한계가 연구의 기본틀을 짜는데 먼저 명확히 되어져야할 것이다.

- 정치학외에 주변사회과학들과의 연결이 필요할 것이다. 이념설정, 혹은 민족기축사상의 문제들으로써, 이러한것은 장기적 작업이 돼야 할 것이다. 북에서 내세우는 것에 대한

논리의 거점 마련을 위해 어떤 강박관념으로 즉, 저쪽 이념이 논리의 항정성이 있는데 대한 반응으로 종래 이념급조현상이 있어왔는데, 이런건 피해야할 것이다. 우선, 할수있는것과 할수없는 것을 구분해서 정책적차원에서 할수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작업에 대한 분별이 먼저 서야할 것이다.

안병영 : ○ 미래조망의 문제로 장기조망은 상당히 불확실한 것이며 통일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져야할 것이므로 미래예측에 의 강점을 단기전망에 뒤야할 것이다. 단기전망은 비교적 확실한 것이니까

○ 연구작업에 있어서 가능한 변수를 다 추출해서 상호작용시켜 보는것도 좋으나 곤란할 때가 많다.

논리적전제로써 상수를 먼저 잡아놓고 변수를 조작하면 우리가 연구하고자하는것을 더잘 알아낼수 있다.

박일성 : ○ 민족통일대제작성의 주요목적은 통일정책확립에 있다.

정책이란 우리가 바라는 목적, 이념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찾는것이며 상황이 흐르는데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정책이란 있을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통일에 이르는 여러가지길과 그 변수들을 연구해 볼 것을 얘기하신바 있고, 차관께서도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통일이라 하셨듯이 이미 연구대상과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통일은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통일인 것이다. 북한측이 공산화 통일일것이고, 제3자가 볼때는 중립화 통일일수도 있겠으나 우리입장에서 볼때는 민족사적정통성에 입각한 통일인것이므로 우리의 연구대상은 확정됐으며 오로지 거기에 따른 방법론들이 나오면 될 뿐인 것이다.

○ 우리 논리대로 우리발상법대로 이론전개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상대방을 무시한 사고(思考)란건 있을수 없는 것이니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발상법도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편에다 유도 이용하는 방법론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우발적 상황에 대처한것도 연구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다. 즉, 세계대전이 발생할 경우나 남북한간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등

차 관 : 장시간 토론한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체계 없고, 절도도 없고, 급하면 응기응변, 요행수등으로 하다가 돈낭비하고 일을그릇치는 경우가 많은데 통일문제는 장정(長征)이란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우리세대에 안되면, 다음세대로 연면히 이어져야겠다는 것이다. 질서있고 체계적, 능률적으로 통일문제연구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일꺼리를 하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민족사적 정통성의 개념설정에 있어서도 그 논의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통일조국은, 민족사적인 소박한 정통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야만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민족의 전통, 우리의 것을 말살하려는 것이니까 공산주의가 아닌 쪽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논리인것이고 우리의 통일은 장정(長征)인고로, 잔재주, 파, 이런것으로 민족의 장래문제를 점을 치고, 금을 그어서는 안될 일임을 통감한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 패권을 다퉴때 당시에 이런 유식한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며, 제각기들 민족사적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했는지를 모르겠으나, 훗날 몇백년 뒤의 국사책에 대한민국 한 페이지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써여질런지 알수 없으나 그럴때, 그뒤에 통일이 이뤄졌다할 때에 누구들에 의해 어떤 형태의 통일이 이뤄졌느냐도 중요하겠으며, 남쪽에서는 어떠한 체제속에서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소박하게 시작하고 있긴하나, 바로 그 대목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이 민족통일대계는 어느 평면상에 놓여진 하나의 사업의 명칭이 아니고 사명과 같은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여러학자들이 가진 자질을 다 기울여 이러한 민족의 장래를 위한 작업을 위해 진지하게 참여, 지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4. 北韓社會의 構造的矛盾에 關한 研究

1944-1945

## 目 次

1. 一般事項	109
2. 討議内容 要約	110
3. 討 議 録	114
(1) 北韓의 諸分野에 있어서의 強弱点	114
(2) 北韓이 自体矛盾 打開을 위해 취할 수 있는 方案	136

2010 10 14 14:11

2010 10 14 14:11

2010 10 14 14:11

2010 10 14 14:11

2010 10 14 14:11

## 目 次

1. 一 般 事 項 .....	109
2. 討 議 內 容 要 約 .....	110
3. 討 議 錄 .....	114
(1) 北 韓 的 諸 分 野 에 있 어 서 의 強 弱 點 .....	114
(2) 北 韓 이 自 體 矛 盾 打 開 를 위 해 취 할 수 있는 方 案 .....	136

1941

1942

1943

1944

1945



1. 一般事項

가. 日 時 : 76.11.1

14:30~18:00

나. 場 社 : 本院狀況室

다. 主 題 : 北韓社會의 構造的 矛盾에 관한 研究

라. 施行官 : 政策企劃室 第1 担当官

마. 參席者 : (1) 特別參席 : 董 勳 ( 次官 )

(2) 外部人士 : 金泰瑞 ( 中央情報部 北韓局 副局長 )

金甲喆 ( 極東問題研究所 副所長 )

金洪喆 ( 漢陽大 教授 )

金昌順 ( 高大匪研 研究員 )

崔光石 ( KBS 專門委員 )

吳基完 ( KBS 專門委員 )

(3) 院 內 : 韓英哲 ( 政策企劃室長 )

宋榮大 ( 第1 担当官 )

朴一聖 ( 常任研究委員 )

金炳燦 ( 補 佐 官 )

梁榮植 ( 補 佐 官 )

白樂曙 ( 補 佐 官 )

바. 司 會 : 宋 榮 大

사. 記 錄 : 金炳元 ( 第1 担当官室 勤務 )

## 2. 討議內容 要約

### 가. 討議方向

- 北韓社會 諸分野에서의 強弱點 評價
- 北韓이 自體 矛盾打開을 위해 取할 수 있는 方案豫測
- 對備策 檢討

### 나. 內容要約

#### (1) 北韓社會 諸分野에 있어서 強弱點 評價

##### (가) 政治·思想分野

北韓社會를 劃一的으로 支配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金日成 “唯一思想”은 傳統을 操作한 虛偽에 바탕을 둔 것임으로 이로부터 생기는 戒반모순이 점차 노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출될 것이다.

金日成 “唯一思想”이 北韓社會를 劃一化하는데는 強點이 될 수도 있겠으나 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그 限界性을 보던할 수가 없다. 이러한 劃一主義는 1950年代와 1960年까지는 그 기능을 發揮함이 可能했으나 그 以後에는 強點인 것 같이 보였던 것이 弱點으로 化해가고 있다.

人間性에서 自律性을 剝脫하게 될 때 그 劃一主義 一刃倒는 弱點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기 마련인 것이다.

##### (나) 外交分野

이데올로기 側面을 너무 強調하기 때문에 外交政策決定과정과

外交力量을發揮하는問題 그리고 國家利益을追求하는데 있어서 갈등과 矛盾이 惹起된다. 몇가지 시예를 들면 이데올로기가 指向的인 指示가 強化됨에 따라 商業的, 協商的 要素가 위축됨으로서 利益측이 犧牲당하는 結果를 낳고 國際環境에 不適應을 나타낸다.

外交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도 垂直的인 決定期間, 水平的인 決定이 없으며 強硬一辺制이기 때문에 狀況變動에 따른 柔軟性을發揮할 수 없으며 長期的으로 볼 때 弱點이 된다.

또한 情報의 傳達, 解釋, 判斷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影響이 너무 큼으로 그 正確性에 蹉跌이 생길 可能性이 있으며 結果的으로 現實과의 乖離가 誘發된다.

#### (다) 經濟分野

計劃經濟가 지니는 長點으로 國家目的에 合當한 經濟計劃의 變化可能性, 強力한 推進力等을 들 수가 있다.

반면 長期間의 閉鎖經濟體制의 固守로 인한 技術向上의 沮害, 國際經濟情報에 대한 未熟, 生産施設의 老朽性, 商品의 國際競爭力 弱化, 計劃實現面에서 一旦 部分的인 蹉跌이 發生하면 連鎖的으로 全體에 擴大하는 弱點들을 지니고 있다.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는 基礎科學에 基盤을 두고 所要人力別 科學技術教育의 實施로 適時 配置가 容易하고 科學技術의 發展과 關聯된 人力開發에 있어서 實習中心의 教育으로 技術者 確保가 容易한 반면 高水準의 科學技術

頭腦開發에 自力更生主義의 固守로 政策的, 體制的인 面에서 先進技術導入의 遲延이 不可避하여 純粹科學理論開發에 있어 서도 黨 中心으로 되어 있어 硬直性에서 脫皮하기가 困難하다는 弱點을 갖고 있다.

(라) 社會分野

強點으로는, 唯一支配體制下이기 때문에 上意下達의 迅速性を 期할 수 있으며 統治機能의 多元化, 統治組織의 細密化가 可能한 것등을 들 수 있으며 閉鎖社會의 肯定的인 側面으로 否定的인 外部影響을 遮斷할 수 있다는 強點을 지니고 있다.

한편 中間階層의 役割未備로 意思傳達通路의 機能低下, 下意上達組織의 斷絶 等の 短點을 갖고 있다. 이 以外에도 外部環境에의 適應力微弱, 住民의 不滿解消與件의 不備, 住民 潛在力動員上의 缺陷, 金日成思想과 背馳되는 雜思想의 抬頭, 世代間의 摩擦과 갈등의 深化 等の 弱點을 갖고 있다.

(2) 北韓이 자체모순 打開을 위해 취할 수 있는 方案

(가) 北韓의 對內政策

北韓社會의 內部混亂의 根本的 수습책으로 어린이 교양법, 3大革命小組運動의 大大的인 展開등을 通해서 새로운 機械的人間을 養成하고 人間의 本質을 改造해 보려는 試圖가 最近 取해지고 있다.

經濟分野에 있어서는 外國의 技術導入, 生産施設의 導入등 이 여의치 못한 상태하에서 經濟部門間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해 오직 勞動力榨取, 勞働集約的 方法을 써서 해결하고자 하는 小規模的 形態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는 한편 北韓住民의 不滿을 抑制하기 위해 부단히 超緊張狀態의 造成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對南挑發을 劃策할 것이다. 同時에 새로운 社會意識의 定立策으로 金日成思想을 繼承 發展하는 形態로서 金正一思想의 提示可能性도 想定해 볼 수 있다.

(나) 對外政策

對內的으로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對外的으로는 不可能할 것임으로 유엔外交 등 對外政策面에서는 새로운 狀況展開에 適應하려고 努力할 것이며 情勢判斷結果에 따라 政策決定을 내릴 것이다. 한편 對소, 對中共 外交에 있어서는 1950年代와 1960年代에 있었던 것과 같은 援助의 回復을 摸索할 것이다.

(다) 南北對話

現在 金日成 體制內에 存在하는 3大勢力 (1)族閥勢力 (2)非族閥勢力中 親族閥勢力 (3)非族閥勢力中 反族閥勢力간의 갈등과 軍部와 對南協商關係者들간의 갈력으로 인해 南北對話의 正常化를 繼續 忌避하려고 할 것이다.

### 3. 토의록

#### (1) 북한의 제분야에 있어서의 강약점

사 회 : 북한이 처해 있는 모순을 나눠서 분야별로 토의해 주기 바라  
며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북한연구의 기준도출에 있으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북한의 정치 및 사상분야의 강약점에 관한 것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김항준 : 북한의 정치사상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이란 문제로부터 시작  
된다. 북한공산당의 사상은 김일성 사상만이 유일사상이며,  
그 이외의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발전된다.

1972 년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북한의 지배적사상, 지배적  
이념으로써, 김일성사상을 내세워 김일성주의라 일컬어 왔으  
며, 그것으로 북한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조작해 왔다.  
어느 공산당이든, 지배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엔 야당  
적 입장에서 정치투쟁을 거쳐 지배정당이 되는데, 북한공  
산당의 경우는 처음부터 지배정당이 됐으며 과거의 전통  
같은 것이 없었다.

만약 북한공산당이 전통을 계승하려면, 일제하의 조선공산  
당의 전통을 계승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었던  
것이다.

일제하 조선공산당의 1차적 정책목표는 민족독립이었으며,  
그 다음 전략전술로써 그러한 민족독립을 얻고 나서는,

지배정당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북한공산당은 조선공산당의 세력을 다 말살하고, 러시아에서의 맑시즘, 소비에트제 원형을 그대로 북한에 이식하였다.

50년대까지, 북한공산당은 식민주의적 정당으로써, 정치사상적으로 소비에트주의, 스탈린주의가 그냥 그대로 북한에서 주장됐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북한공산당이 어떠한 자기의 전통을 갖지 못했음을 노승하는 것이다.

그후 반성에 들어가서, 60년대에 이르러 유일사상, 김일성 사상등을 내세우고, 북한주민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도 이에 명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접속시켰으며 모든 것이 김일성의 항일투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만든 것이 김일성 사상의 체제이다.

70년대에 와서 주체사상이 나왔는데 인본주의라 할까, 모든 것을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해결하고 인민을 위해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나는 그 의의를 인정않는다.

다만 전통을 조작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항일투쟁에서부터 유일사상을 만들어내고, 사실과 다른 조작들을 해놓은 것이며, 이러한 것은 다른 공산당들에는 그 유례가 없는 것이다.

강약점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의 정신적발전을 획일적으로 끌고 나가는 점은

강점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이것은 약점이다. 인간성에 자율성을 주지 않고, 획일적으로 통제할 때 강한점도 있으나, 반면에 약점도 동반되는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의 건설단계로 볼 수 있는 50년대, 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통제방식의 강화에 있어서 획일주의의 본령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그 뒤 강점이 약점으로 화해 점차 이제 모순이 들어 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근본적문제이고, 부수된 사회문제로는 생활의 통제 그 자체가 북한에서는 문제가 돼가고 있다. 가령 초기 북산공산당 간부는, 그 아버지가 노동자, 머슴출신이 많았으나 지금 30대에 들어갈 정도인 그들의 아들들은 지주가 될지 프롤레타리아가 본질적으로 될지 잘 모른다고 본다. 이런 점들은 초기의 왕성했던 계급투쟁의식과는 좀 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본다. 시기상조적인 단언지는 모르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쏘련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 북한사회가 그렇게까지 간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싸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북한공산주의의 지배적이념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수립된 정권이 아니고, 또 그런 과정을 제대로 겪지 않은 사회인 까닭으로, 북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써의 김일성 유일사상은 전통을 조작한 것이므로, 그러한 허위의 것에서부터 생기는 모순이 점차 발로 될 것이라고 본다.



김갑철 : 외교정책 결정과정이나 외교역량문제 등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이익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강경한 정책을 강행해오고 있으나 대외정책으로는 또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므로 이 양자간의 갈등과 모순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는 다섯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

제 1은, 김일성체제의 안정과 정통성확립

제 2는, 국가안보

제 3은,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

제 4는, 남조선혁명

제 5는, 국제적지위 향상

김일성체제의 안정과 정통성확립을 우선순위 1위로 정한 것은 김일성의 정권장악의 동기나, 피퇴정권으로 탄생한 콤플렉스때문에 자기의 정통성 확립문제를 정치적 안정, 국가안보유지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정치적 근대화가 안된 북한사회에 있어서, 경제발전을 위해 주민을 사회화하고 동원하는데에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

북한의 외교목표는 북한의 국가이익증진방법과 관련시켜 볼 때, 대(對)공산권 외교에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란 측면에, (對)서방외교에 있어서는 한미관계, 한일과계를

이간시키는 것, 주한미군의 철수의 책동,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시설재를 도입, 북한 경제발전에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

대(對) 중립국외교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본다. 중립국들의 지도자는 사실은 민족 부르조아지이다. 이러한 민족 부르조아지적 요소와 국제반제, 반식민주의 통일전선 형성이란 내용은 어느면에서는 일치하나, 어느면에서는 모순되게 나타난다.

예컨대, 콜롬보에서의 비동맹회의 케이스는 국제혁명주의, 반제통일전선, 반식민주의적 역할보다는 민족 부르조아지적 요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써,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재평가하게 된 사례의 하나라고 본다.

- 북한의 외교역량에 있어서는 대개 정책결정과정과 정보판단 능력, 정보해석전달체널, 외교관의 자질, 외교정책집행능력, 특히 정책목표와 집행과의 괴리문제, 외교정책집행시 상대지역에서의 상하구조간의 모순등이 문제가 되겠고,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오는 외교장치의 비신축성등이 합쳐져서 북한의 외교역량이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외교역량을 중심으로 한 북한외교의 강약점은

가) 이데올로기와 국가이익, 어느쪽에 강조점을 두는가 하는 것으로 예컨대 이념적 패턴에 중점을 두면, 주체사상, 김일성체제의 정통성, 이상화등이 강조되고 당적통제의

강변일변도로 인한 전문가 집단이 종속적지위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밍스·레닌주의, 김일성주의의 교조적, 이념적 측면과 한편, 실제 국가이익에 치중한다면, 신축성있는 외교와 외교관의 상업적 협상자세가 요청되는데, 이들 사이에 커다란 모순과 괴리가 유발된다. 실제로는 이데올로기 지향적 지시가 강화되고, 상업적 협상적요소가 위축됨으로써 이익쪽을 희생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국제 환경에 맞지 않는 잡음들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

나) 외교정책결정기구를 보면 2중적 통제를 받는다. 결정과정 에있어서는 당과 정무원에서, 수직적 결정만 있지, 수평적 결정은 없으며 특정인의 지시대로 결정되는 식으로 되어 진다.

정보판단능력과 전달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너무크므로 모든 것을 정치의지적 결정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지향성이 강하다. 그 당연한 결과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고 김일성체제에 불리한 보고는 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판단의 정확성도 문제이고,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해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해석이 안될 경우, 그에 의거한 정책결정이 현실과의 괴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강점으로, 수직적 결정이고, 수평적 고려사항이없으므로, 즉 개방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론 등

이익집단의 압력이 없으므로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고 상황 변동에 따라 국민여론중에 개의회 않고 정책변경이 가능하고 상황변동에 따라 국민여론중에 개의회 않고 정책변경이 가능한 것들은 강점이 되겠는데 이것은 북한뿐만아니고 다른 왜해사회가 모두 갖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강점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코 강점이라 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한 것이다.

라) 외교관자질 : 이데올로기, 당이론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제 모든 것이 이데올로기 지향적이 되고, 수직적지시에 의해 무조건 복종이란 상태에서 외교활동이 이뤄지고 현지 외교관에게 자유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현지에서의 분위기나 환경과 모순되는 엉뚱한 외교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교관의 비능률성의 하나로는 상호불신, 상호감시, 공식적 위계와 위장적 위계간의 갈등(예컨대 대사가 그 공관의 주인이 아니고 운전사가 보-스인 것등의 모순점)

가장 큰 외교관의 문제점으로는 현지 감각의 부족인데 그 원인은 전문적이 천대받고 당성이 강한자가 우대받는 것에 기인하며, 현지에 가서

적응이 안돼, 존엄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 모든 것이 하향적이므로(자유재량이 없고)보신주의, 아부주의의 경향을 지닌다.

외교집행능력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공격목표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형식상으로 볼 때 모든 외교관들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므로 신속성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정통성 획득의 측면으로 인해 외교적 낭비(김일성 우상화, 김일성 P.R. 등)가 많으며 이런 것에 부심하다보면 외교관 본래의 업무에 불성실하게 될 약점이있다고 본다. 외교에 있어서 공산권 국가가 갖는 특수성을 측정하는 세가지 표준으로 이하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ㄱ) 그 나라가 공산화될 당시의 근대화나 경제적 발전 정도

ㄴ) 그 나라의 정치분화가 어느정도로 개방적, 합리주의적인가

ㄷ)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할 당시의 「패턴」(Pattern)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패턴을 가질 때는 주체사상까지 합쳐서, 배타적, 독선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공산화체제자체가 피퇴정 권일 때는 비외교적 정통성 선전등에 치중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근대화, 경제적발전이 부진한 폐쇄사회이므로 모든 것이

정치 주도형이 되고, 전문가보다는 당성이 강한자가 승리하게 되므로, 외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동구, 소련의 외교관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바, 공산권국가에서는 그런 걸 감싸주고 있지만 비공산권국가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문제화되고 지시가 떨어졌을 때 현지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는 다시 본국에다 맞지 않는다고 정정을 요구하거나 보고할 수는 없는 것이 북한외교의 실정이므로 무조건 지시한 것을 따라야 하는 점들이 북한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김태서 : 북한경제체제는 국유, 공유의 소유형태로 중앙집권적이며 철저한 계획경제이므로 북괴의 국가목적에 합당한 계획에 변화가 가능한 것. 인적, 물적자원동원의 가능성, 결성작성된 계획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 북한의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 계획경제, 자립경제에 대한 사상과 인식을 주입시키며 해나가는 것. 원료, 식량, 생필품의 자급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 분배면에서 일원화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계획적 분배가 가능하므로 실업의 감소, 소득분배 격차의 감소, 최대한의 건축재정, 국가적 자금축적등의 가능 이러한 점들을 대체로 강점으로 들 수 있겠고, 약점으로는, 체제면에서 장기간의 폐쇄경제체제를 치금껏 고수해 왔고 앞으로도 이것에서

탈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술향상에서의 저해 국제경제 정보에의 미숙성, 생산시설 전반의 노후화,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그리고 경제계획의 중앙집권화로 인해, 김일성을 중심한 집권층의 강력한 의도가 반영되므로써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알면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것. 계획 실현상에 있어서 일단 부분적 차질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부정적인면이 확대돼 나간다는 고질.

관리 운영면에서의 관료주의적 병폐를 시정하기가 어렵고 생산자들의 창의력이 노출되기도 어려운 점들이 북한 경제에서의 약점이라 볼 수 있다. 과학기술면에서는 남한과 비교해 볼 때 기초과학에 기반을 두고 정책정립을 한다는 것 등이 장점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자력갱생주의의 고수로 선진기술도입이 정책적, 체제적인 면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순수과학이론연구 체제면에서 당 중심으로 돼 있으므로 그 경직성에서 탈피못하는 것이 약점이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인력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중심교육으로 돼 있어서 기술자확보에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고수준의 두뇌개발에는 난점을 수반하며, 소요인력별로 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이를 적시에 배치함으로써 효과를 본다는 것 등이 장점이다.

금속공업기술분야에서 현재 기술적으로는 남한과 대등하나 양적으로는 부피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것.

기계공업분야에서 우리는 외국에서의 도입 가능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북괴는 다년간의 노력으로 자체제작 능력이 우수하다. 조선공업에서, 민간조선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있으나 군함전조부문에서는 북괴가 상당히 앞서있고, 이런것이 북괴 과학기술의 부분적장점이다. 전력개발면은 아직 북괴는 수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약점을 지닌다고 보겠고, 전자공업면에서는 텔레비존 흑백정도를 초보적으로 생산하는 정도의 기술수준이며, 화학공업면에서는 우리가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비해 북괴는 정유능력 100여만톤정도에 불과한데다 그에 관련된 석유화학제품은 태무한 상태로 아직도 요원하다고 보며, 경공업분야의 장점으로는 자체원료에 의한 자급위주의 생산으로 북괴주민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

농수산부문에다 기계화에 주력하고 있고, 수련화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으며 자급비료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업부분 기술면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발전이 있다고 보겠고, 수산기술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북괴의 방위산업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 보다는 훨씬 발달되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다. 전투기, 유도탄, 핵무기 등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것은 자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는



탱크같은 것은 아직 자급까지는 안됐으나 곧 거기에 발  
돋움 할 수 있는 기술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 등을 유  
심히 봐야 할 것이다.

최광석 : 요즘 북한사회가 매우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기존질서가 큰 도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최  
근의 북한사회혼란의 원인이 나뉘어 있든지간에 김일성체제  
에 대한 재검토가 여러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다.

북한체제내부의 모순은 권력의 화석화, 경제의 정체화, 사  
회의 폐쇄화, 사상의 질식화 등에 혼란의 주원인이 있는  
듯 하다. 사회적측면의 강약점은 규격화된 사회체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매우 효능이 있으나 계획경제체  
제에서 한 분야가 계획미달시 그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다른 분야에도 심각하게 파급되는 것과 같은 것에서 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 점

- 상의하달의 신속성 (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독재자의 결심이 신속하게 전달시  
행되는 )
- 통치기능의 다원화 ( 독재를 수행하는 북한의 각 사  
회단체들, 직종별, 성별 )
- 통제조직의 세민화  
폐쇄사회가 갖는 긍정적측면으로 일반적으로 외부

사회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며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영향을 약하게 받는다는 것.

- 김일성우상화가 철저히 이뤄지므로써 김일성이 북한사회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

#### 약 점

- 김일성 일인 독재체제의 교훈으로 중간계층에 역할마바가 초래되므로써 상층부의사의 하층에의 전달통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하므로써 하층을 구성하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다.

- 하의상달조직의 단절

서민일반층의 불평불만이 정책기구를 통해 정책적으로 시정되는 길이 거의 막혀 있다. 이것은 김정일등장 이후 더욱 심각해 진듯하다.

- 주민생활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주민생활에 대한 사회 시책적 배려의 부족에 주민동요의 기저를 이루는 원인이 존재한다. 이는 주민스스로가 그 자체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노력이 결핍되는 결과물 야기시키며 중지를 모아 체제의 공고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 외적환경에의 적응력 미약

폐쇄사회의 특징으로 외부사회의 영향을 쉽사리 받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일단 받으면 쉽게 동요된다.

구체적인 것으로는 78년 이후 자유권파의 경제교류시행과 남북대화이후 남한을 인식하므로써 기저가 동요되었으며, 이는 김일성체제의 재검토의 동기가 되고 현금의 북한사회 혼란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 가정생활등에서 남한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불평 불만해소와 여건불비로 이것이 사회전체에 대한 불만으로 집결될 가능성을 기님.

○ 정치사상교육이 사회통치면에서 큰 역할을 해 왔으나 사상교육이 제대로 잘 먹혀들어간 것 같지도 않다. 그 근거로는 최근의 신문보도 등을 보면 적대적계급타도예의 선동등이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사회내부에 그러한 계급이 존재하고 있거나 오랜기간동안의 사상세뇌작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사상(주체사상, 혁명사상등)이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고 철학적 바탕도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모델케이스로 항일투쟁경험을 제시하고 무조건 그 결 전형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의 기초위에서 세

위진것이 아니므로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기동역할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다.

유물사관등 공산주의의 고전적 기초에서 볼 때 김일성사상은 이단이며, 특히, 족벌독재는 프롤레타리아독재와는 무관한 것이며 예컨대, 경제분야에서 김일성이 제시하는 농민시장의 원리해석, 사회주의 경제학의 2원적해석등은 사회주의 경제학의 원리,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적 견해에서도 어긋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현대공산주의의 큰 흐름에 부합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오늘날 동구권에서는 민족적공산주의 방향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오늘날 공산권내에서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민족적공산주의에로 방향을 조금 돌려도, 주민수습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민족사관에서 보더라도 김일성사상은 배척되어야 할, 의지할 곳 없는 사상인 것이며 또 인생관, 기타 개인의 생활면에서 사상이 가지는 역할이 거의 도외시되고 있고 대표적 예가 인생관 자체를 운위하는 것조차 북한에서는 큰 이단시 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사상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회의심을 갖게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주민들의 잠재력동원에 큰 결함지님.

내부자원 동원면에서 체계가, 지닌 취약점이 있으며 사회적 여건의 불비로 창의성 발휘가 저해되고 있다.

엘리트교육에만 치중하며 나머지 대중에게 초급내지 중급기술교육만으로 그침.

공장대학이 금년에 11개 설립되었으나 대학에서도 정치사상교육위주이며 고도의 과학기술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만 양성해서 그들의 두뇌산물을 다수에게 주입시켜 사용케 하겠다는 식을 굳히고 있다.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의 불비가 잠재력동원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잠재력동원은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기성성과를 바탕으로해서 새로운 가치의 첨가가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소련이나 다른공산권국가들에서 이미 연구되어진 것들을 새삼스럽게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과학기술정보 교환면에서 원활해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우리의 경우, 비록 늦게 시작하긴 했으나, 중화학

공업분야 등에 있어서 자유권국가들이 이뤄놓은  
기성성과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교환이 잘 이  
뤄지므로써, 기성성과들을 바탕으로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해 갔으므로 빠른 발전이 이뤄  
진 것인데 반해 북한사회가 지닌 폐쇄성은, 새로  
운 가치창조를 굶뜨게하며, 잠재력동원의 저해요인  
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사회가 현재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은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개조하는 것이라 보  
는데 과연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변질가능성이  
있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상의 변천과정을 보면 과거로 되돌아 가기 위  
해 애쓰고 있는 것 같으며 김일성체제를 굳힐  
시기에 내세웠던 계급교양, 공산주의 교양, 혁명전  
통교양등의 방향으로 현재 정세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구조의 개편보다, 과거로 환원하여 김  
일성체제 구축당시의 의식구조로 현재에 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대역행적이며, 고식적인 방  
법으로 사회적 혼란의 기저를 이루는 사상적 혼  
란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가지, 잡사상운위가 현 북한사회에서는 심각  
한 주요문제라 본다. 김일성사상에 위배되는 모

돈사상을 잡사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분하면,

- 1) 자유사상 : 개방체제에 의해 이입된 사상으로 그  
들말로는 제국주의사상의 침습이 이뤄졌다는 것.
- 2) 복고주의사상 : 이것은 민족의식에 대한 일종의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현체제에는  
없는 어떤 과거사대에의 향수는 현체제를 부인하  
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수정주의사상

이 셋이 잡사상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것인데,

이는 김일성사상과 화합될 수 없고 아무리 사  
상통제를 해도 근절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심각  
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유사상의 침습을 막으려면 왜곡적사  
회를 더 강화해야 하고, 외부세계와의 교육문화,  
경제교류를 차단해야 되는 것인데, 북한의 실정  
으로는 이것이 어려운 현실이고 부분적이거나  
개방적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자유주의 사상의 침습을 막기는 곤란한 것이고,  
자유주의사상이 이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  
한다는 것이다.

복고주의사상에 있어서도 되는 물보다 지한 것  
이어서 아무리 민족의식을 말살한다해도 혹은

공산주의적 민족론을 내세우면서 만민족적 방향으로 내몬다해도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수정주의에 대해서도 현재 소련, 동구제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뫼스·레닌주의가 지닌 원칙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뫼스의 원리를 현실에 맞짱 뜬 적용해 나가는 것인데 북한의 경우는 그걸 수정주의라 해서 완강히 배격한다는 것은 스스로 쏘·동구와의 이데올로기의 공통점을 없애가는 것이다.

경제적측면이나 과학기술적측면에서 그렇게 해서든 불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교역, 과학기술적 지원을 사상적 측면에서 봉쇄해서 못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써는 불가능한 것이고 잡사상은운하지만 잡사상을 근절할 수 있는 의식구조상의 근본적결합이 북한의 사회적 취약점이고 이는 앞으로도 잘 시정될 수 없는 점이다.

○ 세대적 격차문제인데

의식구조면에서의 북한이 세대적이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의 대두는 기존의의식구조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까지 나가고 있다. 예컨대 노간부들의 경력에 관해서도 김정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향으로 까지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항일무장투쟁사를 모델로해서 주민들의 의식의 표본으로 삼아왔는데 의식구조상에 있어서 세대간 격차가 야기되고 있다. 김정일 등장이후 35세 이전과 40세이후와의 세대간 의식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조화될 가능성은 김정일의 횡포, 특히 의식구조면에서의 횡포가 제거돼야 한다는 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선차적으로는 선전, 조직담당비서로써의 김정일이가 선전담당은 때 돼야 되지 않을까 보며, 그런개편까지 하면서 세대적 격차를 좁히려 할 것인가는 문제이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면에서 김정일의 반대세력이 집대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 양상을 띠게 될 것인데 어쨌든 김정일세대인 30대 전반의 의식이 점차 확장되어 북한사회에서의 지배적 의식구조로 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현재 당원들도 65% - 70%가 젊은 당원들이는데 비해, 실제 통제를 하고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역시 기성세대들 즉 김일성세대이기때문에 이런점에서 의식구조면의 격차가 북한사회흐라의 큰 요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좁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런 문제들이 요즘의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김홍철 : 강약점 문제에서 볼 때, 북한자체로서의 구조적 강약점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의 상대적인 강약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북한자체의 구조적 강약점과, 동시에 그것이 상대적 강약점으로써 어떻게 우리에게 도래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군사분야의 분석, 비교의 기준 3가지는 (1) 군사력(병력) (2) 무기 (3) 돈을 들 수 있겠다.

(1) 군사력(병력)을 세분하면

(가) 군대의 구조적스타일 (공산주의 국가군대의 일반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씨의)

(나) 군대의 정신전력 : 공산주의 국가 군대 일반이 타국군대에 비해 이점에 있어 강점을 가졌다고 보는데, 전쟁에 있어서, 전략, 지휘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증오심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인데 공산국 군대에 있어서 는 전략상 기본핵심으로써의 적 개념이 철저하다는 것이며, 정시 전력면에서 북괴군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 인구구조 : 수적으로는 열세이나 정신전력면이나 총동원 체제 등에 있어서 약점을 커버하고 있다.

(2) 무기면에 있어서

현대무기는 매우 약하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자체 자급이 곤란하므로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뒤진다고 본다) 그러나 채택식 무기에 있어서는 훌륭하게 장비를 갖추고 있다.

현대무기는 소·중공이 원조해 주지 않으면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임.

(3) 돈에 있어서 여건이 좋지 못하다

대내적 경제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수지면에서도 크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비 염출이 어려웠고,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막대한 군사비 염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구조적면에서는 강점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 셋을 종합해 볼 때, 물량적면에서는 북한이 약하고, 우리가 강하며, 비물질적면에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상당히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2. 북한이 자체모순 타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

오기환 : 북한이 자체 모순타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사회의 각 분야별 검토가 있었는데, 이러한 강약점중 취약점이 곧 북한이 안고 있는 모순점인 것이다.

북한권력내부에서의 모순과 잡사상외교만연, 같은 잡사상에 속하는 것으로 무사안일주의, 제당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31년간의 김일성 일인 독재체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것이며, 급후로 더욱 성행해갈 것으로 보며 도저히 그 시정이 불가한 것 같다. 계급교양사업 유일사상교양동, 정치교양사업에 주력했으나 이것으로서는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이해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인간의 본질을 개조해보자는 시도가 최근에 취해지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보육교양법 3대혁명소조운동의 전반적인 전개등이며 이를 통해 김일성의 무조건충성, 김일성의 족벌세습책동에도 무조건 수긍하는 것. 새로운 기계적인 인간으로의 조작양성이며, 근본적사상교양에서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정도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지금까지의 유일사상의 취약점을 종합 검토한 끝에 학교 또는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어렸을 때부터 부모출에서

배내어 완전한 기계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에 현재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현금의 이런 북한사회 내부의 혼란을 수습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김일성이 지닌 것 같고 김정일이 후계한다 해도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은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하나의 북한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사상, 권력의 혼란 등이 경제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은, 폐쇄경제체제에서의 생산기술의 낙후성, 산업구조의 낭비적요소 등인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폐쇄적 경향을 지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려면 자유주의사상이 유입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김일성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북한주민에 대한 폐쇄조치를 앞으로 계속 강화해나가면서 경제의 침체를 다른 각도에서 타개하는 어떤 방향이 모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안고있는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때문에 당분간은 발버둥만치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경제부분간에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실상 북한으로선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노동력착취, 노동집약적 발버둥으로 해결해 볼려는 이런 소규모적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도당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의기술도입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등의 개혁적방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앞으로 경제내부에서의 모순이 심화 될 것이다. 이런상황에서는 김일성의 충실한 혁명전사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획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철저한 통제에 의한 창발성의 결여, 생산의욕저하를 인간사상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보완해 볼려는 시도이외에 다른 방도는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사상, 불평불만, 경제적 침체로 인한 생활의 궁핍, 그런 것등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상태의 조성은 필요하고, 초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남도발 등을 부단히 일으키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8.18사건같은 경우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내부의 모순, 취약점등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다른데로 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요컨대 돌파구는 긴장조성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모사후 온전파의 득세가(강경노선의 후퇴) 김일성에게 주는 영향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의 강경책이(대남도발, 심리전 등에서) 온전노선으로 변모될 수는 없는 입장이란 것이다. 중·소의 영향으로 김일성이 고민에 빠지긴 하겠으나 계속해서 더욱 강경책을 고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외에는 김일성체제유지에의 돌파구가 없으므로 이런것은 대남도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물론 대외활동에서는 국제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 예상되나 대남도발면에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양성한다는 기본방침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북한의 기본적 모순이나 취약점을 여기에서 그 보완점을 찾아 불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 중장기적으로 북괴가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남도발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기완 선생이 북한이 자체모순 타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여러선생께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길 바란다.

김창순 선생께서 쓰신 북한의 정치공황이란 글에서 3대혁명 소조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한 여러가지 공황적 상황에 대해 글 쓰신 것을 봤는데 김일성이 정책조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것이 대남전략, 대외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김창순 : 북한이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정치를 하는 지배집단이고 맑스주의가 지상에 현실적으로 준립한 이래로 기존의 공식과 명제에 구애받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민족문제, 한반도에서의 민족과 현실적 상황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공산주의, 그것이 김일성주의이다 라고 돼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논리적 철학적 바탕에 근거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데에 북한공산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책면에서 그들은 이데올로기에서 위기에 직면한 북한  
공산주의가 취할 출구는 한 가지 뿐이라고 생각한 것  
이다.

즉, 과거의 공식 등에 구애되지 않고 차체의 힘에 의  
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구나 여타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도  
의적 후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산주의 세계 내부에  
서도 김일성주의에 대해 논쟁적이 될 것이며, 북한공산  
주의를 공격대상으로 삼을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북한공  
산주의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이 북한공산주의가 공산주의체제내에서 당면하게  
될 문제점들이라고 본다.

사회 : 최근 유엔에서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의외교가 현  
실에 적응하려는 것 같은 동향이 있는데 앞으로의 북  
한외교가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김갑철 : 조선 사회의 변화는 내부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도 있으나 중요한 변화는 스탈린 사망이란 상황때문에 변한 것이다.

북한의 실리적면에서의 외교는

- 1950년대, 60년대에 누렸던 조선이나 중공으로 부터의 원조를 어떻게 회복해 낼수 있을것인가 하는문제.
- 자유세계로 부터 어느정도의 기술도입을 할수 있을것인가 하는것
- 전체예산의 35%에 해당되는 국방비를 얼마나 줄일수 있을것인가 하는것

그러나 남북한의 대치 등 현상황하에서는 매우 곤란하다고 본다.

대외관계에서는 상당히 유연성 있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 본다. 대내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대유엔 외교에서도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세판단결과 정세가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나에 따라 정책은 정해질 것이다. 비공산권에 대한 북한의 외교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때문에 속으로는 싫지만, 겉으로는 협조하지 않을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공산권 내부관계에서는 문제가 다른것 같다.

조선의 이데올로기에서 볼때

개인우상숭배는 맑스레닌주의에 모순되며 봉건주의적 잔재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족주의는 반 소주의로 취급하고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아무리해도 민족주의의 표현인 것이므로 조선학자들은 북한을 막지가 덜떨어진 존엄으로 취급하며 김일성 공산정권의 존립위기, 즉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상황에선 조선에서 돌겠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선은 북한을 신통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 회 : 잡사상 문제와 세대간의 의식격차로 인한, 북한사회자체의 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광석 선생께서 말씀하셨고, 김창순 선생께서도 김일성 주의가 공산권 내에서 곤란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념문제, 주민의식상의 위기등 취약점을 타개하기 위해, 북파가 그 이외에 취할수 있는 대안에 대해 토의해 주시기 바란다.

최광석 : 북한사회의 혼란은 의식구조상의 혼란이 밑바닥에 깔리고 있고 그외에 경제, 정치적 권력투쟁의 격화등이 측면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차피 북한이 그와 같은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서둘것 같다. 현재와 다른 뒀인가를 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 사상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금년에 초상화 철

거, 등을 했으나 내년쯤에는 더 공공연히 내세울 것으로 본다.

김정일 사상을 김일성 사상위 계승 발전된 것으로 해서 여기서 뭇인가 새로운 위식구조의 정립을 서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보이는 것이다.

해체사회가 지닌 취약점은 일단 외부로부터 자극이 침투 되면 순응력이 약하므로 해서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인데 김정일 사상은 외부사상에 적응하는 한 다소 융통성을 지닌 것으로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조된 과거 지향적인 것, 과거에 바탕을 둔 모델로부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뀌 보자는 것이다.

공산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 체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주의적 사회주의이론,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 집단영농 방식 등 계획 경제체제가 지닌 모순을 스스로 타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김정일을 내세워 (새로운 인물, 새세대의 지도자로) 공산주의가 지닌 취약점, 모순점을 다소라도 수정해 보고자 할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다소 새로운 것으로서 외부 영향력을 받아들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상 자세 확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새인간

주조, 새인간으로서의 개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바탕을 두고, 과거 강조만 해 오던것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변경시키며, 모델을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로 옮겨두면서, 사상, 사회의식의 정립을 획책할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지금껏 35세 미만까지도 과거 항일투쟁 과정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기준으로해서 의식구조가 굳혀져 왔는데, 지금부터 다소 방향을 바꾼다 하면 그 과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일 체제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은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인데 젊은세대들에게 까지도 의식혼란을 가져오게 되면 김정일 체제자체가 의식구조면에서 큰 기둥을 잃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갈것인가, 보통의 방법으로 안된다고 보는것이다. 대남, 대외적인 것에서나 중공에 대해서까지 비판적으로 나오므로써 (이때올로지 면에서 중태 쏘련은 비판해 왔지만 중공은 비판한 적이 없었던 것인데) 중공까지 수정주의로 몰아세우거나 (외교관계에 금이가지 않을 한도내에서) 대남도발, 등을 통하거나 어떤 비상 방법을 통해 대내적 세뇌작업을 약간씩 달리 하면서 대외적 자극을 달리하고 사회정책면을 달리한다는것,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현재의 통제를 풀어주는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더욱 강화한다는 것, 35세이하 세대들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력을 다소

부양시켜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은 3대혁명소조, 당 중앙위의 결정이다, 등으로 잡사상 등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종래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밀로부터 비판이 가해지겠끔 해서 사상의 정화를 가져오게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밀로부터 위로 기존사상에 대한 비판을 가하게 하는것 등으로 사회통제 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즉 의형상 완화되는 것처럼 해놓고는 내면에 있어서는 세분화 다원화된 통제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심리전적 측면에서 대남도발의 양태도 달라질 것이다. 대남도발이 대내적 위기수습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겠끔 나올 것으로도 보인다. 내년도에는 북피는 점증되는 사회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더욱 광분할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김홍철 : 군사문제 자체만으로는 조망이되지 않는다. 외교, 경제적 측면도 아울러 살펴야한다. 김일성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것이 뭘까를 늘 생각하는데 김일성은 자기 정권유지가 최대의 필요일것이고 그러자니, 사회변화들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고 정권을 굳히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것 중의 하나가 경제문제인 것이며 김일성이 어떻게든 북한주

민 생활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것은 어쨌든 소, 중공의  
자금이었는데, 그점에 있어서 작년 5월의 교관화의 천진  
연설이 매우 시사적이다. 그중 일귀절로, 김일성이  
중국에 대해 철저한 충성을 받치지 않는한 지원은 곤란  
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 정권유지강화의 기초로서 주민경제 생활을 해결해 줘야겠  
다는것 이것이 싫든 좋든 김일성의 한가지 요청사항으로  
제시되고 있고
- 무기문제, 무기원조는 중공보다는 소련에 부탁해야 할 것인  
데 그런데 무기요청을 소련에 부탁한다 해도  
소련은 현재 브레즈네프 정권이 미국과 유대를 갖고자  
애쓰므로 북한의 요청대로 무기원조를 해주기도 곤란할것  
이며 이점에 있어서 미국군치를 봐야하는 것이고 중공은  
중공대로 미국과의 관계가 일차적인 것이지 북한과의 관  
계가 이보다 더 중요할수는 없는 것이란 현실에 처해 있  
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볼때 외국원조 없이는 김일성이  
아무리 광분한다 할지라도 대남전략에 있어서 자기 임의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때 나오는 방향은  
상당히 저조된 형태일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현안문  
제로 남북한 관계 정상화문제, 유엔에서의 태도의 완화,  
등이 될것이다. 한반도의 군사력상의 균형문제에 있어서  
는 미, 소, 중공등이 공히 밸런스를 유지해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이점은 우리가 우리의 군사정책 전략을 구상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불원간에 남북한의 외교 경제, 군사적 체문제에 있어서 김일성이 상당히 웃을뻔하고 나오지 않을수 없는 상태가 될것이라 보며 이렇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로써의 한가지 잇슈인것 같다.

최광석 : 확실히 김일성이 퇴조기에 처해있는건 사실인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31년간의 대북공세를 취함에 있어서 오늘 처럼 유리한때는 없었다고 본다. 김일성이 과거 4.19때의 실기들 천추의 한으로 여기듯 금일의 정세는 오히려 그 반대경우가 되어 우리쪽에 호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심리전에 있어서 그렇다. 경제문제와 외교적으로 쏘, 중공의 눈치를 봐야한다는점, 등에 있어서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완화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문제와 대남도발의 위험성과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것이다. 권투에서 최대의 수비는 공격이란 전략원칙처럼 김일성은 수세에 몰릴수록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공세의 자세를 계속 취해 나올것으로 보며 대내적 위기 의식을 고취시켜 그들을 새로운 질서으로 내몰기 위해서도 그럴필요는 있을 것이다.

의면상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완화된 태도를

취할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우발적 도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수도 있을것으로 우려된다.

김홍철 : 저쪽에선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판에 이쪽에선 핵무기까지 갖다 장치해 놓고 있으니 저쪽에서 국민들한테 북침한다고 선전하는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김일성 사후가 될지 연세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현재와 같은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는 존속될수 없으리라 본다. 그래서 동구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하고도 생각된다.

사 회 : 아뭇튼 북한을 공존의 방향으로 물고카는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박일성 : 아무리 김일성 유일지도 체제나 족벌체제나 하지만 최근의 여러 동태를 보면 김일성도 단안을 내리기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된것같다. 김일성으로써는 자기 체제의 안정이 앞서야겠는 것이겠고 교조주의적 사회의 모순으로 경제의 파탄, 군사력의 낙후, 중소분쟁으로 어느쪽에 붙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 이런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종래 공산주의 국가들이 취해온 정책들을 보면

- (가) 체제내적 개혁을 통하는 방법
- (나) 숙청
- (다) 수정주의로 넘어가는 방법 등인데

그 계기를 보면



소련의 경우도 스탈린의 사망으로 그것이 가능했고 유고  
는 체제 내적개혁을 통한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것은 티  
토와 같은 현실주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속칭은 중국에서  
의 문화혁명 스탈린이 사용한 방법등을 들수 있겠다.

김일성은 어떤 형태를 취할것인가,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변혁은 이뤄지기 곤란  
할것이다.

그런데 현 김일성 권력체제에는 세가지 세력이 있는것  
같다.

(족벌세력, 비족벌세력 중 친족벌세력, 비족벌세력중 반족  
벌세력)이 세파별간의 갈등이 있는것 같고 군부와 경제  
부문 대남 협상관계자들과 군부간의 알력관계 이런것이 최  
근의 북한동태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점이며 이들 각  
파별간의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것인가가 또한 문제인것이다.  
가령 남북대화에 있어서 군부가 과연 동의할 것인가, 아무  
리 김일성의 명령일언하에 움직인다 할지라도 현재 북한의  
실권자들은 군부라고 보는데 서방측과의 어떤 지원을 교섭  
한다 해도 이때도 과연 군부가 동의할 것인가 동의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점을 두고 볼때 김일성의 지금입장은  
곤란에 처해 있을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남북대화 재개를 체의한다면 그리고 이  
것을 카-터 당선과 함께 생각할때 이러한 것이 우리국익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고 8.18 사건을 겪고나서 단발적 대항적 도발을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도 북괴의 앞으로의 동태, 그 대응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 회 : 이번 토의의 주제가 방대하고 어려운 문제였으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정된 시간에 요령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차 관 : 고속도로로 달리면, 2시간 이내로 갈수 있는 거리가 평양인데도 실로 진백하기 어려운 데가 북한인것 같다. 한 나라에서 문제가 결정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객관적으로 이러 이러 하리라고 본것과 별상관없이 문제가 흘러가는 것을 종종 볼때가 있다.

북한연구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외국에서는 북한연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경청도 해 봤는데 북한을 얘기할때 대체로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다운 그러한 시각, 그러한 관점에서, 논리만 정연하게 기술한다. 해서 그것이 들어 맞는 일이나 하는것이 문제이겠고 때때로 기상천외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평양이고 보니 북한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것 같다.

누가 어느 공식석상에 나왔느냐 만나왔느냐, 이런것들을 갖고 예측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본태를 어떻게 정밀하게, 깊이 들어 가서 연구하는

가가 중요한 것 같다.

서방의 물결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과 논리만으로는, 연구는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6.23선언을 내놓은 그날밤에 북한에서는 5대 강령이 나왔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 가지로 상정해 볼수 있을 것이다.

(가) 그들은 대남문제에 관한 많은 깊은 연구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준비로부터 적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거나,

(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자기들의 국호를 내던지고, 궁극적 목표가 어떻게 되든, 「고려연방공화국」이란 새로운 것으로 될 때, 김일성이 자신의 자리까지를 내놓는다는 것이 그쪽의 방침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북한의 경우, 1인이 일체의 살생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김일성에 의해 그것이 승인되기까지는, 김일성 자신이 그 안을 작성 않는한, 어떤 시발로부터 토론, 결과과정을 거쳐 그것이 내놓아진 것이라면 그쪽의 체질은 어떠한 토론, 여파의 정책 결정과정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때 북한을 연구, 이해하는데에는, 깊은 곳을 훑어봐야 할 것이란 생각이요 역시 북한에 대한 연구는 본태에 대한것부터 해야 할 것이란 것이며, 우리가 가진 남쪽 사람들 나름의

렌즈만 갖고 관측하고 이론을 적용하고 판단하다가  
오류들 범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주 있다는 우려를  
해 보는 것이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통일문제, 북한 문제를 연구  
하는 곳이, 통일원만이 아니라 천군데라도 있었으면  
하는것이 사실은 초원이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파장이 클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  
뒤에 봉루해 오는 학생들에게까지 이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 졌으면 하는 것이며 또, 통일원은 의  
당 그렇게 되도록 기여를 하는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  
다. 여건만 허용되는 대로 자주 이러한 모임을 가졌  
으면 한다.

요컨대 북한을 연구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가능하는 어떠한 기틀이 되고, 그것이 통일에의 자그  
마한 발걸음이 된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통일원으로써는 그들 위해 건마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고 싶다.

사 회 : 이상으로 토의를 종료하겠다.

## 5. 民族統一大計研究 設計圖 試案檢討



# 目 次

1. 一 般 事 項	157
2. 세미나 參加者 檢討 및 評價內容	158
가. 檢 討 分 野	158
나. 檢 討 基 準	159
다. 分野別 檢討 및 評價內容 ( 要旨 )	159

※

11

301

東京大学

301

東京大学

301

東京大学

301

東京大学

東京大学



1. 一般事項

가. 主 題 : 「民族統一大計」研究設計圖 ( 研究課題 ) 初案檢討

나. 日 時 : 1976.12.22 ( 水 ) 16 : 00 ~ 19 : 00

다. 場 所 : 當院狀況室

라. 參加者 ( 17 名 )

○ 當院側 ( 8 名 ) : 政策企劃室長, 第 1, 2, 3 担当官,

政治外交研究官,

朴一聖常任研究委員, 第 1 担当補佐官 ( 2 )

○ 外部人士 ( 9 名 ) : 金 炯 孝 ( 西江大 )

金 学 俊 ( 서울大 )

閔 丙 天 ( 東國大 )

朴 東 雲 ( 한국일보 )

安 秉 永 ( 延世大 )

李 基 錡 ( 延世大 )

李 相 禹 ( 西江大 )

鄭 鎔 碩 ( 東亞日報 )

韓 亨 健 ( 國際法學會 )

1. 司 會 : 宋榮大 ( 第 1 担当官 )

2. 報告書作成 : 梁榮植 ( 政策企劃室 補佐官 )

2. 세미나 참가자 검토 및 평가내용

- 사전배포한 초안(“민족통일대제연구 설계도”)에 포함된 332 연구과제를 9명이 분야별로 분담 검토

가. 검토분야

발표 순서	발 표 자	초 안 내 용 검 토 분 야
1	김 형 효	통일정책목표 및 비존정향 통일정책전략 (한국:국민의 통일의식)
2	김 학 준	분단과정의 재평가, 통일정책전략 (한국: 통일대세의 정비)
3	박 동 운	북한의 통일전략분야
4	민 병 천	북한의 현황 (정치, 외교, 군사)
5	이 상 우	통일에 관한 이론연구 (통합이론분야, 통일방안과 관련된 이론분야)
6	정 용 석	국제상황분석 및 예측
7	이 기 택	한국의 통일정책전략분야 (통일정책의 발전책)
8	한 형 건	북한의 현황 (법률) 분단국 비교연구
9	안 병 영	통일에 관한 이론연구 (통일이론의 출발점) 북한의 현황 (사회문화, 교육)

나. 검토기준

- (1) 연구과제선정의 적절성 여부
- (2) 연구과제별 주요내용 및 연구방향 지침설정의 적절성 여부
- (3) 중복사항,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의 유무
- (4) 과제에 대한 연구진행방법문제를 유념하여 평가

다. 분야별 검토 및 평가내용 (요지)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1) 김형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신이념을 민족통일지도 이념으로 정립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li> <li>- 유신이념을 통일민족 중흥사상화를 위해서는 계급주의 사회화된 북한과 대결함에 있어서 인도주의 (휴머니즘) 에 바탕을 둔 공동선 (Common good) 을 창조할 수 있는 사회건설이 급선무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li> <li>○ 동시에 경제체제의 인도화문제를 의식해야 하며 체제에 대한 국민적인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한면의 손실은 다른면의 보상으로 갚아줘야 한다)</li> <li>○ "가능한 유토피아"로서의 민족통일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의 변화속에서 주도 면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li> </ul>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전개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사상사의 핵이 무엇인가를 도출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토스”적인 기질과 “루고스”적인 면을 융화시켜야 한다.</li> <li>- “신바람”의 기질 (일면 감정적이고 무당적이고 대중적인 기질로 볼 수 있지만)을 이성적인 것으로 길들여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li> <li>- 불교의 “어머니 같은” 정신, 유교의 “아버지 같은” 정신을 융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li> </ul> </li> <li>○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는 참다운 민주주의요소를 근본을 보는 이상적인 차원과 현상을 보는 현실적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설득력있게 대내외에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li> <li>● 통일철학의 과제로서는 새로운 나라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업의 철학으로써 성 (성리학의 개념), 즉 대동 (大同) 의 차원에서 보는 보편성과 평</li> </ul> </li> </ul>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p>즉, 특수성의 차원에서 통일지향의 존립 논거</p> <p>(2) 민족주의와 시민주의를 바탕으로한 민주주의 교육의 실시문제를 고려해야할 것이다.</p> <p>(3) 북한은 현재 "프롤레타리아"학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사회의 학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방향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지향의 차원에서 사회의 학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새마을운동도 탈정치화시켜야할 것이다.</p> <p>(4) 공산주의이론을 순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산주의 이론요소중 교조적인 것은 비판제거하고 현실적으로 진보적 요소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p> <p>○ 본 연구대계에 제시되고 있는 "체제, 이념을 순화한 민족내부의 민주적 통합"문제는 시급한 과제와 동시에 어려운 과제이다.</p> <p>(1) 명분(합법성)과 실리(효용성)간의 갈등상을 극복조화할 수 있는 철학제시의 문제</p> <p>(2) 동의와 비판의 조화문제</p> <p>(3) 開(자유)와 合(질서)의 조화 문제</p> <p>(4) 현실과 이상간의 공통분모의 표출문제 (양극단을 지향한 용평의 개념속의 형평의 원칙 문제)등</p>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이 과제로 제시한 “통일특지국가의 경제 체제 확립” 문제는 또한 배농을 수 없는 주요 과제라고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한국에는 제량경제학자는 있어도 경제철학자는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경제질서의 문제를 경제학자에 게만 전담시키는, 왜채성을 탈피시켜야 한다.</li> </ul> </li> <li>○ “한국민족문화의 융성 및 발전을 기약하는 문화민족의 미래상 정립” 과제는 한국의 철학창조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유능한 학자, 유능한 예술가를 육성하는 길이 곧 통일민족의 미래를 기약하는 길이 될 것이다.</li> <li>○ 결론적으로, <u>민족통일대체연구</u> 구도에 있어서 통일철학의 비존재시문제는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하고 싶다. 대체로 연구해야 할 과제는 잘 제시되고 있다.</li> <li>○ <u>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u>에 관해서는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허구적 논리에서 출발된 사상체계여서 연구의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민족의 통일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대치</li> </ul>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2) 집학준	<p>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공산주의와 김일성사상을 구별하고 반민족적 본질을 파헤치며 반김일성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내의 통일지향적요소와 통일저해요소” 문제에 있어서는 “천민자본주의”로 흘러가는 요인을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 (현세주의, 권력, 금권위주의 개인의 안일추구 일변도 경향은 통일저해요소가 되고 있다)</li> <li>- “같이 괴로워 한다, 같이 산다”는 공동의 시련의식을 걸러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통일 의식과 가치관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사상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li> <li>-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연후에 이런대책, 저런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현상유지적 교육보다는 통일미래를 바라보고 “저항의 지성”을 “창조의 지성”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li> <li>○ “분단과정의 재평가”에 대한 과제설정은 전반적으로 좋다고 본다. 모두가 다 연구해야 할 “테마”라고 보는 것이다.</li> </ul>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p>○ “분단의 배경, 요인, 경위” 연구에 있어서 (1)분단의 국내적 요인을 분석하는 때에는 통상적으로 정당, 정치 “엘리트”간의 분열상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당시 사회경제적 분단요인을 규명토록 해야 할 것이며,</p> <p>여타 분단국(독일)의 경우를 비교,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내세의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의제작용의 축소화를 위하여 분출된 민족세력의 노력을 사례로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p> <p>○ “3.8선 획정문제와 외군주둔 및 철수문제”에 있어서는 과제와 내용방향이 다소 연결성이 부족한 감이 든다.</p> <p>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론은 본과제에서는 논의하지 말고 이와는 별개로 독립시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p> <p>○ “북괴정권의 수립경위, 성격 및 변천과정 연구” 과제에 있어서는 (1)북괴정권의 대두배경에 추가하여 소련의 점령정책을 동구, 북구점령정책과 비교평가하도록 하고</p> <p>(2)동시에 주체사상이론의 등장배경, 과정과</p>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p>역할문제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이전의 분야별사회실태 종합” 연구과제에 주요내용 방향설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보다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li> <li>○ “남북협상사례 (실패요인 재평가) *에 있어서는 김구뿐만 아니라 김구식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li> </ul> <p>동시에 외교기술 협상전략차원에서 탈피하여 사회학적 연구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동란체제에 관한 연구과제는 참 좋은 “테마”라고 보는데 한국전쟁의 원인, 기원, 성격과 6.25 당시의 북파의 남한절령정책은 보다 심층연구해 볼 과제라고 사료된다.</li> <li>○ “통일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존조사 (신문사, 정보기관, 통일원)를 종합분석하고 통일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용이주도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li> <li>○ 본 민족통일대계연구 설계도는 상황분석면에서 포함되어</li> </ul>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3) 정용석	<p>야할 요소(기본연구)는 거의 망라했다고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상황분석 및 예측분야에 관한 연구과제는 치밀하게 정리되었고 내용지침도 적절히 작성되고 있다.</li> </ul> <p>다만, 중복된 감이 있으며 연구순서가 다소 뒤바뀐 인상을 느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과제는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li> </ul> <p>(예) *주변 4강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이해 관계 및 통일 한반도에 대한 예상되는 태도예측* 과제는 (1) *주변 4강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이해 관계 연구와 (2) *한반도 통일과 4강의 입장*으로 구분하였으면 좋을 것 같고, *한반도 정치질서의 제모델에 관한 연구* 과제의 내용지침중 전반부인 *가용한 모델 및 체제의 특징* 부분과 후반부인 *통일을 위한 새로운 한반도정치질서의 모델정립* 부분은 2개의 과제로 세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p>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4) 이기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문제를 위요한 남북한 및 4강의 상호작용”을 2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본 것은 치밀한 연구계획의 반영이라고 본다. 여기에 첨가하고 싶은 과제는 “국제사회의 이데올로기 (특히 4강과 구주)의 변화예측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요소”에 관한 연구이다. 국제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추세를 한반도를 위요한 국제동향분석 예측과 병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한반도 분단의 주요요인가운데 하나는 곧 “이데올로기”문제였기 때문이다.</li> <li>○ “민족통일대계연구”의 개념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즉 기초조사연구와 정책연구분야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설계도는 기초조사연구에 비해 정책분야가 미약한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통일대계연구”라는 표현보다는 “민족통일문제연구대계”라는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른다. 정책대계는 별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li> </ul> </li> </ul>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p>○ 통일정책차원에 관한 정책연구주체의 문제, 전략개발 및 대화기구의 문제가 심각히 검토되어야 한다.</p> <p>- 남북관계에 있어서 첩보기관이 대화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난점이 많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갈 실질적인 주체기관의 참여 상태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치 못하고 수세의 입장에 서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p> <p>이제는 북괴가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야 비로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태도방식은 탈피해야 한다.</p> <p>- 예컨대, 유엔군사령부 해체이후의 대책을 결정할 결정기구가 어느 곳인가? 북한은 당기구가 있다. 그러나 아축은 그 자체가 정부의 하부기관인 중앙정보부에 맡겨진 상태가 아닌가? 그것도 그 속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협의조정국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p> <p>따라서 민족통일대계를 연구하고 정책을</p>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p>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기구의 임무, 책임, 권한문제가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p> <p>○ 본 연구설계도에는 통일원 창설이래 연구해 왔거나 국내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 및 통일관계의 연구과제는 거의 다 종망라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우선순위나 연구구분과 방법이 설정되었다고는 보지만, 좀 더 집약되고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다듬었으면 좋을 것 같다.</p> <p>○ 그리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는 과거에 해오던 개론적이고, 추상적인 만성적 정책입안의 타성을 탈피하여 "책략적"이라고 할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구체적인 전술적차원의 대책입안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연구된 북한연구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분석적인 수준으로 높이면서 실제정책기능의 활성화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p> <p>( 예 : 4 자회담에 대한 구체적 전략 )</p> <p>○ 추가해야할 과제로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상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김일성이외의 인물들의 신축성있는 태도와 결정요소를 추적해야 하리라고 본다.</p>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5) 박동운	<p>-예컨대 박성철의 정책결정상의 융통성있는 권한행사가 주목되어야 할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p> <p>○ 본 연구설계도에 전쟁상황하의 통일정책문제에 대한 연구계획도 삽입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 본 과제는 중무 1300 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별도연구계획으로 발천시킬 성질임)</p> <p>● 통일에 대한 "콘센서스"의 문제로서 특히 해방이후세대에 대한 의식구조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p> <p>○ 북한의 대남전략분야의 연구는 비교연구론적 차원에서 시도하되 대책입안을 중시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p> <p>-북괴의 대남전략과 병행, 아시아의 공산주의운동의 변천사와 전략변화 양태등이 연구되어야 한다.</p> <p>-수세적 대응전략의 입장에서 부터 공세적전략 입장을 도출해야 한다.</p> <p>○ 필히 추가해야 할 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6) 민병천	<p>(1) 김일성퇴거후 권력구조변화예측과 대남전략 변천가능성 연구</p> <p>(2) 북괴의 대남모형 가능형태의 유형연구</p> <p>(3) 북괴의 남한정세분석의 접근양식 분석 - 북괴는 북괴식의 교조주의적인 정세관의 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 <p>○ 북한의 현황분석과 예측분야에 관해서는 비교적 세밀하게 종합되고 있으나 다소 중복된 점이 있으며 한국내부의 상황분석과 예측분야가 소외 되고 있는것 같다.</p> <p>- 한국내부상황이 통일문제에 미치는 촉진요소와 저해요소 관계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p> <p>○ 정치심리전적 차원에서도 통일당시의 청사진의 - 윤곽 ( " 통일국가의 기본계획 모형 " ) 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p> <p>- ( 예 ) 토지소유의 문제</p> <p>○ 남북한 통일역량비교 부분을 좀 더 세분화했으 면 하는 느낌이다.</p> <p>○ 군사적 통일문제는 " 무력통일론 " 에서 전개는 되었지만 보다 넓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기택교수와 같은 의견 )</p>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7) 한형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정치분야중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 분석”을 과제로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다. 김일성의 작용요인과 그 밖의 요인을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li> <li>○ 북한외교분야중 유엔외교와 비동맹외교는 독립 항목으로 구분했으면 한다.</li> <li>○ 북한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북한경제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분석”을 새로운 과제로 삼입하는 것이 좋다. 여타 분야(외교, 정치, 군사요인)에서도 같은 식으로 연구과제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li> <li>○ “북한의 원조부문” 분석에 있어서는 외채문제와 차관문제중 독립과제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li> <li>○ 분단국 비교연구 분야는 총체적으로 파악이 잘 되어 있고 연구과제와 내용방침도 적절하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요소는 보충 또는 삼입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단국의 통일기구 비교분석”중 서독의 경우 하원에 속해있는 “내북관계 및 백령을 위한 분과위원회”도 내북 관계성과 전 북문제연구소와 함께 비교연구</li> </ul> </li> </ul>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p>(2) 법률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분단국(독일)과 북한에 대한 법적문제에 치중한 느낌이다.</p> <p>-대한민국의 법적지위 확립문제가 더욱 중요하다.</p> <p>이를 위해 동·서독 법적지위 규정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서독의 분단국 특수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반도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p> <p>(3) “고려연방제”(북괴)안도 “국내법상의 연방제”와 “국제법상의 국가연합”의 시각을 구별하여 양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p> <p>(4) 분단국 비교연구에 있어서 특히 동·서독간에 논의되고 있는 “민족”, “인민”, “국민”의 개념구분 내용에 대한 법적해명은 매우 유익하게 될 것이다.</p> <p>“중립화 통일문제 관한 연구”는 “영세”중립화연구로 개칭함이 타당하다. 스위스와 인도를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p>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8) 안병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모델 안출을 위하여 "구주경제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li> <li>○ 모델연구시도는 꼭 흥미로운 과제라고 본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연방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심층연구해야 하리라고 본다.</li> <li>○ 북한의 사회문화분야의 과제들은 거의 망라는 다 되었다고 본다.</li> <li>○ 모든 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1)인구학적 분석 (2)구조적 분석(사회계층구조, 문화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등), (3)가치관의 문제 (4)사회지표 분석(생활수준의 계량적 분석 포함) (5)소외문제(참여와 동원간의 차이)와 새로운 자극으로 인한 폐쇄사회의 급변가능성등의 문제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li> <li>○ "북괴의 대중조직에 관한 연구(군중로선을 중심으로)"는 중공의 경우와 비교 연결시켜 폭넓게 분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li> <li>○ "북괴 주요사회단체에 관한 연구"과제는 기구, 연혁, 임무 및 기능, 자율성의 한계, 조직의</li> </ul>

검 토 자	검 토 및 평 가 내 용
(9) 이상우	<p>특징외에 “간부, 주요인물들의 속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보건현황 및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보는 “의사”의 개념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며 숫자상의 비교보다는 본질적인 비교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li> <li>○ 북한경제분야에 있어서는 (1) “북괴의 경제기획 과정에 관한 연구”와 “생산관리체제연구” (단위 생산체와 상위체제 연관성과 자율성의 폭문제)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li> <li>○ 일반론적으로 비교공산주의연구의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연구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동구의 몇나라를 심층연구하여 (체제변화 문제와 관련) 북한과 비교함으로써 유형의 특징을 도출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li> <li>● “통일에 관한 이론연구”분야는 순수이론과 정책선택이론과의 구별개념이 모호한 것 같다. 연구구분을 보다 적절한 단어표현으로 바꾸었으면 좋을 것이다.</li> <li>○ “시뮬레이션”분야는 남북협상에 활용하는 대책에 국한시키지 말고 영역을 확대시켰으면 한다.</li> <li>○ “평화공존론”연구과제는 통합이론의 연구와는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li> </ul>

學 報

第 一 卷 第 一 期

一 九 四 〇 年 一 月

第 一 頁

第 二 頁

第 三 頁

第 四 頁

第 五 頁

第 六 頁

第 七 頁

第 八 頁

第 九 頁

第 十 頁

第 十 一 頁

第 十 二 頁

第 十 三 頁

第 十 四 頁

第 十 五 頁

第 十 六 頁

第 十 七 頁

第 十 八 頁

第 十 九 頁

第 十 十 頁

第 十 一 頁